

P20-400

자료 열람실

第7次 南北高位級會談 會議錄

1992. 5.

統 一 院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5
가. 第1日 會議錄	7
나. 第2日 會議錄	71
〈附錄〉 1. 雙方代表團 聲明 및 記者會見	113
2. 雙方 晚餐演說	163

1. 一般事項

가. 期 間 : 1992. 5. 5(火)~5. 8(金) (3泊 4日)

○ 第1日會議 : 5. 6(水) 10:00~12:10

○ 第2日會議 : 5. 7(木) 10:10~11:27

나. 場 所 : 신라호텔 「다이네스티」홀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首席代表〉</p> <p>鄭 元 植 (國務總理)</p> <p>〈代 表〉</p> <p>金 宗 輝 (大統領 外交安保首席秘書官)</p> <p>宋 庸 燮 (國防部 合參 第1次長, 大將)</p> <p>林 東 源 (統一院 次官)</p> <p>孔 魯 明 (外務部 外交安保研究院 院長)</p> <p>李 東 馥 (國務總理 特別補佐官)</p> <p>朴 庸 玉 (國防部 軍備統制官, 准將)</p>	<p>〈團 長〉</p> <p>연 형 목 (정무원 총리)</p> <p>〈代 表〉</p> <p>김 광 진 (인민무력부 부부장, 大將)</p> <p>안 병 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p> <p>백 남 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p> <p>김 정 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p> <p>최 우 진 (외교부 순회대사)</p> <p>김 영 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소장)</p>

※ 隨行員 : 쌍방 각기 33명, 取材記者 : 북측 50명

會 議 錄

第 1 日 會 議 錄

가. 제1일 회의록

〈쌍방대표 입장 및 인사교환〉

(기자들 사진촬영)

남(수석대표) : 앉으십시오. 어디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북(단장) : 예, 일 없습니다. 뭐 총리선생과 또 이 호텔에서, 우리 주변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친절성을 베풀어서 무고하게 하룻밤 잘 보냈습니다.

남(수석대표) : 성의는 다하는 것 같습니다만.

북(단장) : 예.

남(수석대표) : 어제는 `더군다나 또 어린이날이 돼서 식사후에 그 여흥을 어린이 합창으로 해서 혹시 집생각 나게 만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북(단장) : 예.(웃음)

남(수석대표) : 뭐 가족들, 어린이들 생각들 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곤 하는데 어제는 마침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런 여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단장) : 우리측에서는 소년단 창립절을 기념해서 6월 6일을 그저 아동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체육경기도 하고.

남(수석대표) : 아, 그래요?

북(단장) : 예, 그리고 예술공연도 하고.

북(안병수) : 학교 단위로, 학교단위로도 하고. 학교 연합모임들도 가지고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해요.

북(단장) : 야유회도 많이 하고, 학부모들 같이 하루 아이들을 위해서 좀 유쾌하게 보내고.

남(수석대표) : 지난 4월에 그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데 고속도로 편도선까지…….

북(단장) : 예, 지난 4월달에 우리가 여러가지 큰 대상들 많이 준공했는데 그 정총리선생이 아마 6차때 와서 들었을겁니다.

남(수석대표) : 예.

북(단장) : 5만세대 조업하게 된다는 통일거리도 다 끝나고.

남(수석대표) : 5만세대도 완공을 했습니까?

북(단장) : 다 완공하고 다 새집들이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고속도로 준공도 다 하고, 그 거리가 한 4백리 되지?

북(백남준) : 156km, 156km입니다.

북(단장) : 156km면 거의 4백리지? 이거는 도로폭도 많이 넓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총리 선생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수석대표) : 개성, 평양간의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겠지요? 그 얘기는 서울, 평양간의 거리도 가까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북(단장) : 예, 도로폭도 많이 넓혀놨으니깐 정총리선생 뿐만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남(수석대표) : 다음에 저희는 평양회담 갈 때는 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갔으면 합니다. 단축이 되며는요.

북(단장) : 예.

남(수석대표) : 그저 들으니깐 고속도로를 이렇게 직선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산을 절토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공사가 좀 어려웠습니까?

북(단장) : 그런 직선, 아마 그 세계적으로 보면 그 고속도로 방향을 대부분 8백미터 이하로 잡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잡은 방향을 천미터, 천이백미터까지 비교적 직선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산을 뚫고 나간 것이 있고 좀 다리가 많고, 그대신 속도 많이 높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남(수석대표) : 자연도 많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북(단장) : 예, 일 없습니다.

남(수석대표) : 농토 보존 잘 되겠지요?

북(단장) : 예, 일 없어요. 산지대니까.

남(수석대표) : 그게 이번에 어떻게, 4차선인가요?

북(안병수) : 예, 4차선입니다.

북(단장) : 예, 4차선.

남(수석대표) : 콘크리트?

북(안병수) : 아스팔트.

북(단장) : 지난 4차, 언젠가, 평양에서 6차회담 이후에 정총리 선생 몹시 바빠 보냈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한 이래, 곧 연말에 있을 선거준비때문에 몹시 바쁘게 보냈겠습니다.

남(수석대표) : 아직은 뭐 그렇게 바빠 준비를 요하는 게 없습니다마는 3월달 선거로는 저희가 이제 정말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 딱 다

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언제나 선거에서는 과거의 예에서 보면 소란이 있었습니다다는 이번에는 유세장에서조차 그런 소란이라든가 혹은 남을 비방하는 일이라든가 그런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한가지 그 만큼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가고 있고 또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외국의 언론들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로서는 깨끗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북(단장) : 아마, 정총리선생을 만난지 두달, 두달 반이 되는가?

북(안병수) : 예, 두달 반, 두달 반 됩니다.

남(수석대표) : 두달 반 만에 만났는데. 지금까지 꼭 추울때 이럴때만 만나는 때가 많았는데 이제 봄에 만나니까 또 좋네요.

북(단장) :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압니까?

그건 그 「팀」(팀스피리트)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남(수석대표) : 남산에 신록이 아주 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요사이 그 신록이 아주 온 산을 다 메우다시피 할 즈음에 뭐 회담도 인제는 그런 새싹이 또 돋아나올 때가 됐으니까.

북(단장) :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내가 이번에, 이번까지 오다보니까 서울에 4번째 길인데, 이번에 올때는 좀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번째 까지 올때는 북남합의서 채택에 몰두했지마는 이번에는 이 발표시킨 북남합의서를 실천에 옮기는 첫 회담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남(수석대표) : 그렇습니다.

북(단장) : 좀 기쁜 마음가지고 왔어요.

남(수석대표) : 지금 우리도 기대가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실행한다, 이행한다
다는 좀 뭘, 증거를 국민들에게.

더이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괜히 뭐 합의만 해놓고 왔다갔다만 하느냐?
그런식의 여론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북(단장) : 그래서 그 이후에 북남 분과위원회의 결과를 놓고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회담을 좀 잘 진척시켜
봅시다.

남(수석대표) : 서로 좀 잘해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회담을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우리측이 주관을 해야 된다는 관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북(단장) : 예.

남(수석대표) : 지금부터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제1일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보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도진 퇴장 및 장내 정돈〉

남(수석대표) :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되 관례에 따라서 초청측인 우리측이 먼저
기조발언을 한 후에 귀측에서 기조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단장) : 예, 좋겠습니다.

남(수석대표) :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겠
죠?

북(단장) :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남(수석대표) : 예, 그러면 그렇게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먼저 우리측
기조연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측 기조연설문〉

연형묵 정무원 총리,

그리고 북측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제1일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나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
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제7차
고위급회담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서울을 방문한 연형묵 총리를 비롯한 북
측 대표단 여러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남과 북은 지난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고위급회담 이후 3개의 분
과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각각 세차례의 회의를 갖는 등
합의서 이행을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문제와 상

호 핵사찰문제를 협의해온 각 분과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오늘 열리는 제7차 고위급회담은 그같은 쌍방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평화와 통일의 길로 출범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할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고위급회담 대표들이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남북이 힘을 합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와 함께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측대표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19일, 7천만 온 겨레의 뜻과 정성을 모아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켰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분단의 고통속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 그것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를 약속한 역사적 문건입니다.

분단 이래 최초로 쌍방의 최고당국자가 재가하여 발효시켰으며 온 겨레와 세계 앞에서 그 실현을 확약한 이 소중한 합의는 우리 민족사에 새 장을 연 이정표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냉전적 사고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며, 발전과 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동참하여 민족의 저력을 마음껏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우리 겨레를 민족사의 어두운 그늘로부터 희망

과 역동의 세기로 이끌어줄 훌륭한 장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역사적 의의가 크면 클수록 이를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야 할 우리의 책임과 사명 또한 더욱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간의 합의를 성실히 지키고 이행해 나가야 하며, 그럴 때만이 7천만 겨레앞에 평화와 통일의 믿음을 안겨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남북관계를 돌아보고 우리의 지표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적대와 대결의 상대로 보아왔던 과거의 남북관계와 화해·협력시대의 문을 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남북관계는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귀측도 아다시피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 쌍방사이의 관계가 정지되거나 완성된 관계가 아니라 현실 인정과 미래지향이 복합된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상호 실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정적 측면이라면, 평화를 정착시키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가운데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측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결시대에 집착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지난 40여년의 대결상태로부터 비롯된 현실을 무시한 채 미래만을 앞서 이야기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같은 비현실적 자세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천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은 남북관계를 한걸음도 진전시킬 수 없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는 어디까지나 현실인정의 바탕위에서 상대방 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남북기본합의서』를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에 옮겨나갈 때 평화와 평화통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이러한 인식의 토대위에서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합의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실천으로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측담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평화통일을 향한 대장정의 길에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랜 분단 세월과 그동안 평화와 통일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불신과 갈등만을 심화시켜 온 남북관계를 돌이켜 볼 때 이 첫걸음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렵게 마련한 평화와 통일의 궤도를 따라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물자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하는

관계를 착실히 구축해 나간다면 천리길도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해 나갈 결의를 다시한번 명백히 밝히면서,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려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북측대표 여러분!

남북 쌍방은 지난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화해와 평화와 협력을 제도화하는 실천적 노력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함께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쌍방은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족시한이 정해져 있는 이행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와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해 왔습니다.

나는 남북 쌍방이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회의와 위원접촉을 통해 상호 공통점을 찾아 합의를 이룩하기 위해 기울여온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교류·협력분야의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구성·운영하도록 명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행기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는 5월 19일까지는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발효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과위원회가 이같은 시간의 촉박성을 감안하여 발족시한이 명시된 이행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 쌍방이 그동안 2개월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여러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서도 열흘 정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이행기구를 발족시키는 문제를 타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행기구의 발족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한 채 제7차 고위급회담을 맞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각 분과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연락사무소를 비롯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 그 시한이 명시된 이행기구의 발족문제입니다.

귀측도 아다시피 『남북기본합의서』는 합의서에 시한이 명시된 이행기구에 대해서는 발효 후 3개월안에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9일 이전에 이들 이행기구를 발족시켜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회피할 수 없는 우리 고위급회담 대표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모든 분과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 채택문제를 획일적으로 이행기구 발족문제와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분과위원회의 실질적 진전을 어

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올바르게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각기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분과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북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부속합의서의 채택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측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행기구를 정해진 기한안에 발족시켜야 한다는 일념하에, 3개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하는 등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속합의서의 내용과 채택방식에 대해 쌍방간 의견차이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데 시간의 경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속합의서 채택에 시한을 설정해서는 안되며, 『남북기본합의서』에 시한이 명시되어 있는 이행기구는 정해진 기한안에 발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부속합의서의 채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해야 하고 또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특성에 맞게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속합의서는 『남북기본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 실질적 대책을 규정해야 하며 몇개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해야 할 것인가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사안별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획일적으로 포괄적 단일 부속합의서만을 채택하여 『일괄합의, 동시실천』하자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부속합의서의 형식을 일률적으로 포괄적 단일합의서로 한다면 어느 한 조항이 합의되지 못할 경우, 부속합의서 자체가 작성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조항들 가운데는 쉽게 합의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도 있고 합의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측으로선 남북 쌍방이 각기 제시한 부속합의서안을 토대로 일단 협의를 진행한 후 합의되는 사항들은 이를 합의문건으로 작성하여 발효절차를 밟도록 하되, 합의되지 못한 사항들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자는 입장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처음부터 부속합의서에 완벽하게 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포함시키지 못한 사항이나, 수정·보충해야 할 사항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측은 부속합의서를 순차적·축차적 방식으로 채택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같은 우리측 입장은 합의서의 정신과 내용에 충실할 뿐만 아

나라 남북관계의 현실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귀측은 부속합의서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정에서 충분히 토의하여 귀측이 철회하였던 문제들을 다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의 테두리를 벗어난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쌍방 당국이 분단 46년 만에 처음으로 관계개선을 약속한 기본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을 이끌어줄 소중한 지표인 만큼 어느 일방이 그 정신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작성하려는 부속합의서는 단순히 『남북기본합의서』 각 조항을 구체화 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남북간에 합의만 되면 이를 곧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분과위원회에서 그 시한을 설정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조속히 부속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에서 나는 분과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우리측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북측대표 여러분!

나는 지난 2개월여동안 진행된 분과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지켜보면서 합의서 이행과 관련하여 남북간에 공통인식을 넓혀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인식이 형성되어 신뢰의 기초가 다져진다면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를 넓혀 합의를 쉽게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해 나가는데서 남북 쌍방이 인식을 함께 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남북간에 공통의 인식이 필요한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7. 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을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남북 쌍방이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지금 쌍방간에 나타나고 있는 견해차이는 원만하게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자주원칙은 남북간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민족자결 정신에 따라 당사자인 남북간에 직접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남북 쌍방이 상호간의 문제를 외부의 개입없이 당사자사이에 직접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상대방의 실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남북 쌍방은 각기 자기측의 고유한 법질서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 쌍방이 자주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은 북의 법질서를, 그리고 북은 남의 법질서를 존중하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쌍방의 정부당국은 각각 자기측 지역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체인 만큼 남북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사항의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남북 쌍방이 통일정책이나 방안과 같은 중대한 민족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 정부 당국을 외면하고 일부 정당·단체나 개인을 상대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이는 자주의 원칙을 어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원칙은 민족문제를 일체의 무력사용이나 폭력적인 수단을 배제하고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문제는 그 뿌리를 동족상잔의 전쟁과 40여년에 걸친 정치적·군사적 대결을 통해 쌓여온 적대감과 상호불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신뢰구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모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준수함으로써 쌍방간에 착실하게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면 남북 사이의 정전상태는 공고한 평화상태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검증하기 위한 상호사찰을 조속히 실시하고 군사분야에서도 신뢰구축 조치를 강구하면서 군축을 추진함으로써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남북의 7천만 겨레가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

족적 화해를 바탕으로 단합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단합은 남북의 거래들 사이에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이라는 공통의 분모가 먼저 마련되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대단결은 남에서나 북에서나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창의를 존중되고 복수의견이 허용되는 가운데 기본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과 북에 사상과 이념이 다른 양체제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화와 교류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그 공통분모를 넓혀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로, 남북간에 공통의 인식이 필요한 문제는 고위급회담과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북 쌍방은 지난 여섯차례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3개의 분과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의 고위급회담은 앞으로도 정기회담과 수시회담을 개최하여,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 문제를 계속 협의·해결함으로써 평화통일의 튼튼한 가교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 쌍방이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위급회담의 중요한 사명중의 하나는 남북간의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준수를 보장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위급회담은 각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활동을 지도하

고, 의견대립 사안이 생기면 이를 조정·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분과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심의·확정·발효시키고, 분과위원회에 위임해야 할 새로운 사항을 협의·결정하며, 그 밖에 새로 제기되는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위급회담의 이러한 기능을 감안할 때 쌍방 총리는 그동안의 진행결과를 토대로 분과위원회가 제 사명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분과위원회의 미진한 사항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고위급회담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과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이 이미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해당부문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또한 해당부문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과위원회는 공동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그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 이행대책 중 합의되지 못한 사항, 새롭게 제기되는 사항과 고위급회담의 위임사항을 협의하고, 부속합의서를 수정·보충하는 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계속 활동을 해나가야 하는 필수적인 기구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위원회 역시 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의 실천기구로서 쌍방 수석대표의 지도·조정·위임아래 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겨나가는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귀측이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시 기본발언에서 “공동위원회의 운영과 합의사항의 집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위급회담이나 또는 분과위원회의 테두리안에서 해당대책을 제때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공동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의 실천기구로 두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편 남북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시한이 명시된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쌍방이 합의하는데 따라 필요한 여타의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는 고위급회담과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및 향후 위상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고위급회담의 기구와 그 기능에 관하여 남북이 상호 인식을 함께 하고 활동방향을 바르게 정립한다면 『남북기본합의서』가 원만히 이행됨으로써 남북관계를 빠른 속도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남북간에 공통의 인식이 필요한 문제는 쌍방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합의방식과 실천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남북기본합의서』의 각 조항에 따른 구체적 이행대책들이 한꺼번에 일괄하여 합의되고 동시에 실천될 수 없다는 것은 귀측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각 조항 가운데는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하여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실천에 이르기까지에는*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조항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포괄적·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각 조항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광범한 사안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귀측이 주장하는 『일괄합의, 동시실천』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합의 가능한 부분도 다른 문제가 타결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더욱이 모든 문제를 동시실천해야 한다고 할 경우 합의사항의 실천을 무한정 뒤로 미루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남북기본합의서』가 그야말로 선언적 합의로 그치고 말 우려마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간의 각종 합의는 『건별합의, 즉시실천』의 원칙하에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이행·실천해야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합의가 어려운 사항들도 합의를 쉽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남북 쌍방이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한 공통인식을 가질 때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성을 더욱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북측대표 여러분!

지난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서명·발효된데 따라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온 겨레의 기대와 여망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그러한 겨레의 여망을 도외시한 채 올해에도 또다시 8.15를 계기로 이른바 『범민족대회』, 『남북해외 청년학생통일대축전』, 『전민족정치협상회의 소집』 등 정치행사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북기본합의서』가 정식으로 발효되어 남북 쌍방 당국간에 그 이행을 위한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는 이 시점에서 귀측은 대결시대의 남북관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외투쟁을 또다시 전개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체결된 합의문건이며, 따라서 남북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마땅히 쌍방 당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되는데 따라 처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추진하는 정치행사가 명백히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즉각 중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는 화해와 협력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따라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남과 북은 지금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한 사업과 실천방도를 찾을 때이며 대화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정치선전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남북 쌍방이 해야 할 일 가운데서도 서둘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바로 이산가족문제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형제를 지척에 두고서도 생사를 모를 뿐만 아니라 편지 한장 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남북간의 비정상적인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산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은 물론 온 겨레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간에 자유로운 왕래와 상봉 그리고 재결합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해 왔으며,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금 시점에서 그 심정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산가족의 재회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남북으로 흩어진 혈육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해결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있어 남북적십자회담이 중단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책임있는 쌍방 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남북기본합의서』에 명백히 규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 쌍방 당국은 하루속히 그 구체적 이행대책을 마련하여 적십자단체가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이산가족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인도적 과제입니다.

나는 귀측이 진정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할 의지가 있고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의 진입을 바라는 온 겨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쌍방 당국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실천을 적십자단체에 위임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동의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나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의 가시적 실천사업으로서 우리측이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고령이산가족 교환사업을 제의하고 귀측의 호응을 촉구해 온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제 귀측은 그리운 혈육과 상봉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보내다 백발이 된 고령이산가족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이에 대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측대표 여러분!

남과 북이 이땅에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핵문제와 관련한 의혹이 남아있는 한 남북간에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이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는 긴박하고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귀측도 지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의 안전을 위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긴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하였으므로, 남북 쌍방은 모두 핵문제의 긴박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를 갖지 않으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온 겨레와 세계 앞에 약속했으며, 이제 남은 일은 상호검증을 통하여 비핵화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내외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겨레와 세계의 관심 속에 탄생된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그간 세 차례나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없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남북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14일, “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로 공동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쌍방은 약속한 바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속히 핵사찰을 위한 사찰규정 채택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모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내외에 천명하였고, 또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1항, 2항, 3항에서 남북이 이미 각기 실천하고 있어야 할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비핵화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사찰규정 마련과 검증뿐이며. 옥상옥격인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는 원천적으로 필

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측이 일관되게 취해온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별도 이행합의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측의 반대로 철회했던 내용들을 다시 들고나와 이에 대한 토의를 먼저 하자면서 사찰규정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귀측의 그같은 태도는 우리와 온 세계로 하여금 귀측의 핵무기 개발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오히려 질게 만들고 있으며 한반도 핵문제의 긴박성과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귀측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7천만 온 겨레는 핵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측은 귀측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씻기 위해서, 귀측 지역에서 핵과 관련하여 의심이 가는 모든 시설과 장소를 민간이나 군사를 막론하고 사찰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귀측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귀측이 의심하는 우리측 지역의 모든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 사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심을 한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심되는 시설과 장소에 직접 와서 보고 확인하게 하는 것이 의심을 푸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측은 사찰을 하고자 하는 측이 일방적으로 사찰대상을 지정하고 상대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특별사찰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관건은 남북상호사찰 실현에 있으며, 따라서 남북 쌍방은 이미 약속한대로 철저한 사찰제도를 갖춘 남북상호사찰을 6월 초순경에 반드시 실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상호사찰을 실시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 쌍방의 실천 의지와 함께 우리 민족의 평화애호정신을 국제사회에 선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 개발을 위한 그 어떤 시설이나 물질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남과 북은 온 겨레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건히 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귀측이 핵문제 해결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상호사찰규정 마련과 상호사찰 실시에 보다 진지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귀측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조치협정을 비준, 발효시킨데 따라 귀측에 대한 국제핵사찰이 조속한 시일안에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측대표 여러분!

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 47주년이 되는 날이며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처음 맞는 광복절입니다.

남과 북은 금년 8. 15 광복절을 단지 일제 식민시대의 질곡에서 해방되

었다는 역사적 기념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화해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은 지금까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인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해옴으로써 엄청난 민족적 역량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과 북은 지루하고 암울했던 적대와 대결로 점철된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약속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켰습니다.

따라서 금년 8.15 광복절에는 7천만 민족이 다함께 어울려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여는 상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고 첫번째로 맞이하는 금년 8. 15 광복절에 즈음하여 『8. 15 경축방문단』을 상호 교환할 것을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8. 15 경축방문단』 교환 기간은 금년 8. 15를 전후한 10일 정도로 하던 될 것입니다.

『8. 15 경축방문단』 규모는 이산가족을 비롯하여 정치인, 경제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교수·학생 등 각계인사와 취재기자를 포함한 300명 정도로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8. 15 경축방문단』은 상대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8. 15 기념식 뿐만 아니라 문화행사, 학술토론회, 체육경기대회 등 다채로운 경축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15 경축방문단』 교환은 쌍방 당국의 주선과 지원·보장하에 실시되어야 하며 상대측 지역에서는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8. 15 경축방문단』 교환 문제는 그 성격상 현재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협의·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8. 15 경축방문단』 교환을 실현하게 되면 분단으로 인해 반분된 광복의 기쁨이 한데로 모여져 우리 민족에게 있어 가장 뜻깊은 8. 15 광복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겨레가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8. 15 경축방문단』 교환이 민족화해를 도모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통일의 날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측대표 여러분!

지금 세계는 냉전체제가 무너진 가운데 평화를 바탕으로 제각기 실리추구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제환경에서 우리 민족이 자존과 번영을 누리며 평화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족사의 요구에 부응하여 탄생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충실히 지키고 이행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평화를 보장하

며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일 『남북기본합의서』의 준수를 소홀히 하거나 적극적인 실천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불신의 씨앗이 되어 대결시대의 불행과 고통을 지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평화와 통일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가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튼튼한 초석으로서 영원히 기록될 수 있도록 슬기와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잘 이행하고 분과위원회 등 관련기구들을 순조롭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은 남북 쌍방 고위급회담 대표들에게 부여된 숭고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남북 쌍방이 이같은 역사적 소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존중과 호양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비록 쌍방간에 몇가지 문제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능히 이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이행기구들을 순조로이 발족시키는 문제와 부속합의서 채택문제가 제기되어 있으며,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는 비핵화 이행을 검증하기 위한 상호사찰규정을 시한내에 마련하는 문제가 긴급한 해결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나는 쌍방 총리가 이번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이행기구들이 시한내에 발족하여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사찰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여부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쌍방의 실천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며,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해당 합의를 서명·발효시킴으로써 온 겨레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안겨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오늘 1일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분과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당면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남북 쌍방간에 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단장) : 수고했습니다.

남(수석대표) : 그러면 귀측에서 기초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단장) : 예, 순차에 따라서 제가 기본발언 하겠습니다.

<북측 기본발언>

정원식총리와 남측대표 여러분!

지난 2월 평양에서 있었던 제 6 차 북남고위급회담은 오래동안 북남사이에 존재하여온 반목과 대결의 질은 암운을 가시고 화해와 평화와 협력의 새날을 기약하는 역사적인 합의문건들을 발효시킴으로써 우리의 민족통일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겼습니다.

제 6 차 회담을 분수령으로 하여 우리들의 사업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

어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앞에는 자신이 서명하고 민족앞에 확약한 합의사항들을 리행해야 할 방대한 과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이번의 제7차회담은 이 방대한 실천과제들을 앞에 놓고 마련된 첫 회담으로서 이번 회담이야말로 내외에 공동의 실천의지를 뚜렷이 보여주고 겨레에게 합의문건들의 참다운 가치와 무게를 실감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지금 온 겨레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게 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한차의 드팀도 없이 정확히 리행되기를 바라면서 그 첫 실마리를 풀게 될 오늘의 제7차회담에 관심을 모으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제6차회담의 성과를 놓고 것처럼 기뻐하며 우리들을 고무해준 겨레의 뜨거운 마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것이며 오늘 우리들에게 쏟아고 있는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무겁게 느껴야 할것입니다.

나는 합의문건들의 발효이후 첫번째로 열리는 본회담의 각별한 의의와 더욱 무거워진 우리들의 공동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번의 회담이 합의문건들의 리행과 실천을 강력히 추동하는 또하나의 의의깊은 회담으로 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합니다.

아울러 본회담이 북과 남의 인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구체적인 결실을 가져옴으로써 실천단계에 들어선 회담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게 되리라는 희망을 표시합니다.

남측대표 여러분!

우리들이 제 6 차회담에서 합의문건들의 발효를 선포한 때로부터 두달반이라는 시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합의문건들에 예견된 정치, 군사, 협력, 교류의 세개 분과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 해당위원회별로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여왔으며 협의의 결과로서 오늘에는 분야별 리행기구인 공동위원회들을 탄생시키고 쌍방사이의 연락임무를 담당할 거점으로서 판문점북남연락사무소도 설치, 운영할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들이 거둔 중요한 성과이며 새로운 전진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놓고볼 때 위원회들의 사업은 우리들의 기대에 못미치고있으며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쌍방은 아직 부속합의서작성문제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데로부터 위원회들은 기본문제토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탄생하게 될 공동위원회들이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때에 부속합의서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울것입니다.

우리는 분과위원회들과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금후 사업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제 6 차회담이후의 협의과정을 잠시 돌이켜 보는것도 의의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측도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우리측은 합의문건들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빨리 실천하려는 립장에서 각 분과위원회들의 제1차회의에서부터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기초 문건으로서 포괄적인 부속합의서 초안들을 내놓았으며 이와 함께 북남합의서의 리행기구로서 분야별로 되는 <북남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판문점북남련락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 초안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특히 공동위원회사업내용을 규제하는 부속합의서가 응당 공동위원회 발족이전에 락착되어야 한다는 인식밑에 이번 제7 차회담때에 부속합의서를 발효시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부속합의서와 관련한 귀측의 태도입니다.

우리들이 합의한 <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분과위원회가 북남합의서의 리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할것을 명시하고있습니다.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것은 분과위원회의 기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속합의서가 북남합의서를 리행하기 위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있으며 이것이 확정되지 않고서는 공동위원회가 구성된다 하여도 그것이 운영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를 선차적인 토의과제로 제기하고 그 초안을 협의의 기초로 제시한 리유도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물론 부속합의서의 작성시한은 명기된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될 5월 19일 이전까지, 더 좋기는 이번 제 7 차 회답에서 서명발효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이처럼 중요하고도 긴절한 부속합의서문제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귀측은 분과위원회가 열린 첫날에 사실상 빈손으로 나와서 우리가 제시한 부속합의서초안을 협의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고 외면하였으며 지어 부속합의서의 작성시한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시한을 따로 <<합의한것이 없다>>느니, <<시한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느니 하면서 부속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지연시켜왔습니다.

귀측은 부속합의서작성의 선행공정으로 <<선협의>>요, <<협의과제토의>>요 하는 주장을 하였으나 부속합의서초안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스스로 다 풀릴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구태여 따로 설정하고 논의하려는것자체가 문제처리를 공연히 복잡하게 하고 시간을 끝자는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는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느것은 먼저 토의하자고 하고 어느것은 뒤로 미루면서 북남합의서의 리행대책을 전면적으로 협의하려 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문제들의 토의를 회피하려는 귀측의 편향적인 협의자세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협회의 순차를 <<경중완급>>을 가려서 정하자는 귀측의 의견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난날 거듭 논쟁을 벌여온것으로서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자는것이 바로 우리가 내놓은 일괄합의, 동시실천의 원칙입니다.

협의를 실천의 순차와 관련한 의견상이를 해소하고 북남합의서를 리행해 나가자면 우리는 싫든 좋든 이 원칙에 따를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경우 쌍방이 합의하는 특수한 문제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전별합의, 전별실천의 방법을 적용할수 있다는것도 예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괄합의, 동시실천의 원칙에 따라 정치, 군사 문제와 협력, 교류문제를 함께 합의하고 함께 추진시키기로 하였으며 신뢰구축문제와 군축문제도 함께 합의하고 동시에 추진시키기로 하였던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이제와서 <경중완급>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면서 어느것은 먼저 하고 어느것은 뒤로 미루자고 하는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논쟁거리를 다시 만들어내는것이나 다름없는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귀측은 군사분과위원회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막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를 위한 대책으로 군사당국자사이의 직통전화설치문제 한가지만을 협의하자고 하였지만 우리는 귀측의 그와 같은 견해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막자면 사후대책보다 사전대책이 더중요하고 선차적인것이며 직통전화의 설치보다도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와서까지 벌리는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여러가지 명목의 위험한 대규모전쟁 연습부터 완전히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이처럼 선후차에 대한 견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 적당한 문제를 선별하여 그것을 먼저 토의하자고 고집하는것은 도저히 협의를 진척시키려는 태도라고 볼수 없는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북남합의서에 서명하고 그것을 발효시킨 오늘날에 와서 모든 조항들을 다 성실히 리행하려고 할 대신 쉽고 어려운것을 가리면서 어느것은 먼저 하고 어느것은 뒤로 미루며 어느것은 할수 있고 어느것은 할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것자체가 북남합의서의 핵심적인 사항들의 해결에 달라붙지 않으려는 극히 소극적인 회담자세를 보여주는것이며 동시에 북남합의서리행전반에 대한 성실치 못한 자세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과위원회들의 사업을 총화하면서 우리가 특히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분과위원회들에서 전혀 문제로도 될수 없는 우리에게 대한 《핵사찰》을 전제조건으로 들고나온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총리가 참석한 귀측 당국의 한 협의회에서 이것이 하나의 《방침》으로 굳혀지고 당국측에서 이것을 공식표명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으며 그후 분과위원회들에서 귀측의 이러한 립장이 공공연히 표명된데 대하여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귀측에서도 잘 알고있겠지만 우리들이 북남합의서를 발효시키고 그 리행을 겨레와 세계 앞에 약속하였을 때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약

속된것이 없었으며 전제조건이라는것이 있을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것이 리행대책을 협의하는 마당에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전제조건이란 말입니까.

〈핵사찰〉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보류한다면 당초에 하지 말아야 할것이지 무엇때문에 합의서를 최고당국자의 비준까지 받아 발효시킨 이제와서 전혀당치도 않는 문제를 걸고 리행을 보류한다는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습니다.

〈핵사찰〉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로도 될수 없는것입니다.

귀측이 념두에 두는것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사찰이라면 그것은 귀측이 간참할 성격의 문제도 아니거니와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와 아무런 문제없이 핵사찰을 받기 위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가 핵담보협정에 서명하고 지난 4월 9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제 3 차회의에서 그것을 비준까지 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습니다.

귀측이 말하는 〈핵사찰〉이 북남사이의 핵사찰문제라면 이문제는 지금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귀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귀측이 이것을 모르고있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모든것을 뛰여넘어 분과위원회 회의마당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핵사찰〉을 요구해나설수 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핵사찰〉을 북남합의서리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것은 아무런 타당

한 근거도 없으며 지금에 와서 <핵사찰>을 운운하는것은 어떤 의미에서
는 김빠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귀측이 사리에 맞지 않는 문제를 들고나와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위한 분과위원회들의 사업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시간을 끈데 대하
여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는 의견상이가 있을수 있고 그것을 절충하느라
시간이 예상했던것보다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며 따라서 리해도 할수 있지만
핵사찰문제와 같이 타당성이 전혀 없는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의도적으로 협의를 진척시키려고 하지 않는것은 허용될수 없는 일입니다.

귀측은 이러한 자세로 하여 오늘까지 수차례 진행된 분과위원회들의 사
업이 영향을 받고 결국은 부속합의서의 작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응
당 자책감을 느껴야 할것입니다.

남측대표 여러분!

제 6 차회담은 우리 민족앞에 래일에 대한 밝은 희망을 안겨주었으나 사
람들은 훌륭한 합의문건들을 발효시킨 오늘날에 와서 귀측이 무엇때문에
공공연히 그 리행을 지연시키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분과위원회들의 사업을 개괄하여 볼 때 귀
측이 합의문건에서 물러서려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특히 정치분과위원회에서 표명된 북남합의서에 대한 귀측의 이러저러한 자의적인 해석과 구차스러운 논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의혹을 가질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주고있습니다.

명백히 밝혀두지만 우리들이 발효시킨 북남합의서는 동상이몽의 합의서가 아니라 북과남이 지난날의 반목과 대결을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와 협력 속에서 함께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공동의 뜻을 확인한 합의문건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달리 해석할것도 없고 애매한것도 없으며 모든것이 명백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북남합의서의 정신과는 어긋나게 이미 명백하게 된 일련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는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첫째로, 대미관계문제입니다.

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의 하나는 북과 남이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동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하는 민족자주정신입니다. 귀측도 이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로 되는 외세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두에게 명백한바와 같이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내정에 간섭을 하고있는 유일한 외세인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북남합의서에 담겨있는 민족자주정신을 귀중히 여긴다면 용당

대미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남조선에 있는 미군이 <<전쟁억제력>>이며 그것이 자주적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본질적문제가 될수 없다고 하면서 북남대결시대의 대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미군도 그대로 두려 하고있습니다.

지어 나라가 통일된 다음에도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이 <<전쟁억제력>>이라고 하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미군에 의존해서 보장하겠다는 말인데 이것은 북남사이의 자주적인 평화노력을 귀측자신이 원천적으로 거부하는것이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까지 선언한 오늘의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것이나 같은것입니다.

북남합의서에 담겨져있는 자주적 정신과 원칙 그리고 불가침에 관한 선언은 오늘 대미관계를 재조정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것을 회피할수도 없고 지체시킬수도 없는 응당한 의무로 일정에 제기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귀측으로서 지금 당장 미군을 다 철거시키지는 못한다 하여도 최소한도 그러한 의지와 태도는 분명히 해야 할것입니다.

만일 귀측이 이렇게 하는것을 거부하고 합당치 못한 논리로 종래의 대미관계를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귀측의 자주성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귀측스스로가 허무는것이며 <<남과 북이 주체가 되여>> 자주적원칙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귀측의 주장을 빈말로 되게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귀측을 그야말로 자주적인 대화상대방으로 믿고 대

화를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도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주적원칙에서 북과 남이 주체가 되어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귀측이 먼저 철저한 자주적립장에서야 하고 이러한 립장에서 대미관계를 재조정함은 물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킬 용단을 내려야 하며 이 문제를 회피하려 하거나 덮어두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귀측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의 다른 하나는 화해와 협력의 정신입니다.

귀측이 북남합의서의 발효를 두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평하고있는것도 이러한 정신을 인정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살려나가는데서 주되는 장애로 되고 있는것은 우리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과의 거래와 접촉을 일체 차단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법>이 오늘 우리들이 확인한 화해, 협력의 정신과 량립될 수 없다는 것은 남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있으며 귀측 당국에서도 잘알고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속될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북남합의서를 리행의무가 없는 그 무슨 <신사협정>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여전히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정치분과위원회에서 <상대방의 법질서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각별히 강조하고있는 뜻을 잘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의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합의사항이며 이런 뜻에서 상대방의 법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이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법질서의 존중>을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기 위한 방패로 삼는다면 그것은 엄중한 과오로 될것입니다.

민족적화해는 우리의 목표이며 이른바 <법질서의 존중>이란 어디까지나 민족적화해를 도모하는데 복종되는 하위의 개념입니다.

그런만큼 민족적화해에 배치되는 <법>은 오늘날에 와서 더는 존재할 자리가 없는것입니다.

상대방을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법>을 그대로 두는것은 상대방을 존중할데 대한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화해를 도모할데대한 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을 거역하는것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상대방의 법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명목밑에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려고 할것이 아니라 마땅히 민족적화해의 정신과 상대방을 존중할데 대한 합의사항에 충실하게 그것을 없애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각당, 각파, 각계 각층 인민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의 당국뿐만아니라 집권당이건, 야당이건, 제도권이건, 재야이건 관계없이 우리 민족성원모두가 조국통일의 주체라고 인정하고있으며

통일문제는 바로 그 주인인 민족의 단합된 힘과 역할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조국통일 3대원칙의 하나인 자주의 원칙에 대하여 괴상한 이론을 전개하면서 그것이 무슨 상대방의 <대표성>을 인정할것을 전제로 하고있다는니 <대표성>을 인정한다면 통일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오직 당국만을 상대로 협의해야 한다는니 하는 <결론>을 도출하고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러한 구차스럽고 리치에도 맞지 않는 <이론>에 대해서는 구태여 론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귀측이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이른바 <창구일원화>를 합리화하며 통일문제해결에서 <정권>밖의 사람들을 배제하려 하고있는데 대해서는 그 잘못을 명백히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측은 우선 통일의 주체가 우리 민족, 우리 인민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조국통일은 그에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과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는 거족적인 위업입니다.

통일론의가 당국에 의해서 <범죄시>되여온 때에도 <정권>밖에서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이 통일운동을 즐기치게 벌려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통일정세가 오늘날만큼 호전된것은 중요하게 이러한 민족주체적력량의 통일운동의 결과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보지 않고 오늘날에 와서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

을 통일론의에서 배제하려는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외곡하는 것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무시하고 그들의 응당한 권리를 짓밟는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민족의 념원과 요구에 맞게 통일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귀측은 또한 통일문제가 당국이 관장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 문제이며 정치문제라는것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통일문제를 행정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그것을 당국사이에서만 해결하자는 것은 독단주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민족문제이며 정치문제인 통일문제는 행정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북과 남의 모든 정치세력과 전민족의 총의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창구를 일원화》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와 협상에서 각당, 각파, 각계각층을 배제하고 봉쇄하려는것은 그 누구로부터도 결코 지지를 받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귀측이 적합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창구 일원화》를 정당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반목과 대결로부터 화해와 협력, 교류에로 전환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적조건에 맞게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광범한 정치세력과 인민들에게 통일성업에 기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귀측은 이밖에도 또한 우리들이 합의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민족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민주주의》, 《인권문제》와 억지로 결부시킴으로

써 민족대단결의 리념을 심히 외곡하고있습니다. 민족대단결과 귀측이 말하는 <민주주의>, <인권>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민주주의>, <인권> 문제로 슬그머니 둔갑시키려고 하는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의 대결적이며 분렬주의적인 반공체제로부터 판데로 돌리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재삼 강조하지만 진정으로 민족대단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야 하며 어디까지나 리념대결의 유물인 반공체제를 버려야 합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제반 사실들은 제 6 차 고위급회담이후 귀측이 분과위원회들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온 까닭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나 명백한 합의문을 자의로 외곡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이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건 이미 발효된 북남합의서가 대미 관계문제, <국가보안법>문제, <창구일원화>문제, 반공체제문제 등 귀측이 풀어야 할 일련의 신중한 문제들을 일정에 제기하고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것입니다.

귀측은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분과위원회사업을 지연시키는것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발효된 북남합의서에 충실하고 조국통일이라는 신성한 민족적임무에 충실하려면 마땅히 이상의 절박한 문제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단안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남측대표 여러분!

지금 우리들앞에는 제 6 차회담이후 분과위원회 회의들에서 제기된 논쟁 문제들에 해답을 주고 합의사항들이 제때에 리행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쌍방사이에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문제, 공동위원회를 내오는 문제, 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문제, 비핵화공동선언을 리행하는 문제 등에서 아직 의견차이가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들에서 타개책을 어떻게 찾겠는가 하는것이 이번 제 7 차 고위급 회담의 기본임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그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제 6 차회담에서 채택발효된 <<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제 2 조 1항과 제 2 조 2항에서는 각 분과위원회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해당 부문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리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사이에 현재 논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우선 부속합의서를 몇개로 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와 군사 그리고 협력, 교류 분과별로 북남합의서 해당 분야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각각 하나씩 만들자는것이고 귀측은

정치분과와 군사분과에서 여전히 조항별, 과제별로 된 여러개의 부속합의서를 만들자고 하고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선 쌍방이 다같이 고려하여야 할것은 부속합의서를 분야별로 하나씩 만드는것이 북남합의의 기본요구라는 것입니다.

부속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북남합의사항에는 그것을 해당분야별로 작성하게 되어있지 조항별, 과제별로 작성하게는 되어있지 않으며 그 수도 단수개념으로 표현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문해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분과위원회 회의들에서 충분히 강조한바 있으므로 여기서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속합의서를 분야별로 단일화하여 종합적으로 하나씩 만드는것은 그것을 넘겨받아 집행하는 공동위원회가 부속합의서를 리행하는데서 해당 분야의 여러 조항들사이의 통일성과 련관성,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일 부속합의서를 조항별로 따로따로 만들어 여러 단계로 공동위원회에 넘겨준다면 공동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리행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효율적으로 밀고나가는데서 제약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속합의서를 분야별로 단일화하면 조항별로 여러개를 만드는것보다 문건의 작성과 채택에서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중복공정을 없애는데도 좋을것입니다.

귀측의 주장대로 조항별로 부속합의서를 만드는 경우 매부속합의서마다 서문과 총적규제조항, 수정조항과 발효조항 등 같은 내용을 거듭 반복하여

포함시켜야 하며 서명작업을 하자고 해도 번거로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속합의서를 우리가 제기한대로 정치분과와 군사분과에서도 각각 단일화하여 종합적으로 한개씩 만드는것이 가장 합리적일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부속합의서작성에서 논점으로 되고있는것은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로 구체화하여 전개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귀측은 부속합의서가 실천적인 것이 되자면 구체화할수록 좋다고 하고있는데 물론 우리도 부속합의서가 실천성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원래 북남합의서자체가 실천강령인만큼 그 리행을 위한 대책을 담게 되는 부속합의서가 실천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천성의 척도가 곧 문건의 구체화정도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귀측의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천적인가 실천적인것이 못되는가 하는것이 조항내용과 관계되는 문제이지 조항수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기때문입니다.

부속합의서가 많이 세부화되었다고 하여 실천성이 있고 덜 세부화되었다고 하여 실천성이 없다고 보는것은 매우 피상적인 견해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앞으로 공동위원회가 나와 부속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합의서 같은것이 토의될수 있다는 사정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이 만드는 부속합의서가 북남합의서에 비해 많이

전개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공동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기술실무적인 문제까지 다 담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하는 부속합의서가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세부합의서와 구별되는 점도 바로 여기에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부속합의서의 내용전개는 현재 우리가 초안을 제시한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그 테두리안에서 쌍방사이에 의견 조정과 문안정리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부속합의서작성과 관련하여 쌍방사이에서 논점으로 되고있는 것은 다음으로 작성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부속합의서작성시한부를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와 같이 북남합의서발효후 3개월이내로 보고있는 반면에 귀측은 부속합의서작성시한부는 찍혀진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사실상 무한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부속합의서가 언제까지 작성되어야 한다고 따로 명기된것은 없으나 이문제가 공동위원회를 내오는 문제와 뗄수 없는 문제이기때문에 북남합의서에 특별히 그 시한부를 명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공동위원회가 부속합의서에 토대하여 사업하게 되는만큼 부속합의서가 없이는 공동위원회가 나온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없다는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작성시한부

가 따로 명기된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위원회가 북남합의서발효후 3개월이내에 구성되어야 하는만큼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문제도 그 기한내에 끝내야 될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번의 제 7차회담에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정 어렵다면 늦어도 북남합의서 발효후 3개월이 되는 5월 19일까지 부속합의서작성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문제토의를 더욱 다그칠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공동위원회를 내오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화해분야의 공동위원회를 몇개 내오겠는가 하는데서 아직까지 쌍방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남합의서의 불가침분야에서 그 리행과 준수를 위해 하나의 군사공동위원회를 두기로 한것과 마찬가지로 화해분야에서도 정치공동위원회 하나만 두면 충분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한편 귀측에서는 불가침분야에서는 합의서에 규정된대로 군사공동위원회 하나를 내오는데 동감을 표시하면서도 화해분야에서는 조항별에 따라 여러개의 공동위원회가 나올수 있다고 하면서 우선 법률공동위원회를 내오고 다음 비방중상중지공동위원회 같은것도 내올 의향을 표시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위원회를 필요이상 많이 내오는것은 북남합의서리행에 도움이 되는것보다는 오히려 사업에서 혼란과 복잡성이 조성되어 지장을 받을수 있으며 그 운영에서도 부담이 커서 여러모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다고 볼수 있는 군사분야에서 한개의

공동위원회를 내오는 조건에서는 화해분야에서도 한개의 공동위원회로 충분
분히 사업을 감당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해분야에서 정치공동위원회 한개를 내오는것이 합리
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명칭이 문제가 된다면 화해분야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화해공동
위원회라고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면 각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조정과 문안정리에서는 크게 문제 될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번 제 7 차회담에서 정치, 군사, 협력, 교류 분과별로 공동위원회를 모두
탄생시킬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셋째로, 판문점북남련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북남합의서의 제 1 장 7조와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
의서 제 2 조 3항에 명백히 밝혀져있고 쌍방이 다같이 그와 관련한 합의서
안들을 내놓고 초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부속합의서작성문제
와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를 토의할때 함께 내용조정을 하면 될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련락사무소설치장소를 비롯한 일부 문제에서 아직 의견차이가 남아
있으나 그것은 쌍방사이에서 좀더 토의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상의 부속합의서작성문제,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문제, 판문점북
남련락사무소 설치, 운영 문제등이 이번 제 7 차회담에서 모두 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한 분과위원회 위원장접촉 또는 대표접촉을 오늘 오후부터라도 가지자는것을 제기하는바입니다.

넷째로,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사업에서 주되는 논점으로 되고있는 것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한 부속문건을 어떤식으로 만들며 사찰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하여야 할 비핵화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한 부속문건이 공동선언의 전반내용을 다 포괄하는 합의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귀측은 사찰규정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며 사찰대상에서 우리는 핵무기와 핵기지를 포함시키자고 하고 있는데 반하여 귀측은 본질상 그것을 제외시키려 하고있습니다.

귀측이 비핵화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한 부속문건작성에서 사찰조항만을 강조하고 비핵화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의 리행과 관련한 대책은 불필요하다고 하는것은 결국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부정하는것이 나 다름없습니다.

비핵화공동선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있지 단순히 《핵개발》여부를 검증이나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작성하여야 할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부

속문건은 사찰규정만이 아닌 비핵화공동선언의 전반조항을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핵사찰대상에서 핵무기와 핵기지를 제외시키려는것은 조선반도에서 오늘과 같은 핵문제를 발생시킨 근본요인을 부정하고 비핵화의 길을 가로 막는것으로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은 다름아닌 남조선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그 근원을 두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제쳐놓고서는 조선 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귀측이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무기개발>에 대해서는 사찰을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인 핵위협으로 되고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의 사찰은 받을수 없다고 하는것은 누가 보아도 사리에 맞지 않는것이며 그러한 부당한 주장에 집착하면 할수록 비핵화공동선언의 리행의지를 의심받게 되고 나아가서 귀측의 대미자세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더욱더 드러내놓는것으로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찰대상에 남조선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 전 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기본문제토의와 관련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였습니다.

남측대표 여러분!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력사적인 북남합의서가 채택발효된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제 7 차고위급회담은 북남합의서의 리행과 관련한 쌍방의 의지를 민족앞에 검증받으며 북남합의서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회담으로 됩니다.

그런만큼 우리들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서리행과 관련한 문제토의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이룩하는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구체적실천단계에 들어선 고위급회담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며 북과 남의 거래들에게 북남합의사항들이 실지로 리행되고있다는것을 누구나 직접 흐뭇하게 느낄수 있게 하기 위한 몇가지 특례조치들을 취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한 특례적인 사업으로서 우리가 먼저 제기하려고 하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리인모선생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리인모선생으로 말하면 지난 전쟁시기에 조선인민군 종군기자로 남조선에 나왔다가 전쟁포로로 된 사람으로서 응당히 일찌기 공화국북반부로 송환되었어야 할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이 끝난지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을뿐만아니라 그사이에 장장 34년동안이나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옥중고초를 당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하여 불구의 몸이 되데다가 건강이 파괴될대로 파괴되고 년세도 76세의 고령으로서 지금 이시간 현재 의탁할 사람이 라고는 하나도 없는 객지에서 꺼져가는 생의 마지막 한순간한순간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 있는 그의 고향에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기다리던 리인모선생의 어머니가 몇해전에 아들을 끝내 보지 못한채 돌아가고 지금은 꽃같은 시절에 남편과 헤어져 환갑이 훨씬 지나도록 일생을 혼자 살아

은 사랑하는 안해와 유복녀로 태어나 인제는 출가하여 자식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 딸이 눈물속에서 남편과 아버지를 그리며 리인모선생이 돌아올 날만 안타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리인모선생과 그의 가족들이 서로의 소식을 알게 되면서 지척에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의 고통은 더욱더 큰것으로 되었으며 서로에 대한 그리움도 더는 참을수 없을 정도로 한층 절절해졌습니다.

세상에서 불행한 인간과 수난자에 대한 기록과 이야기가 많고많지만 리인모선생처럼 시대와 력사의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어 모진 수난과 고초를 겪은 인간은 드물것입니다.

하기에 리인모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자 우리 겨레는 물론 피도, 피부색도 다른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도 한결같이 리인모선생의 일가가 겪은 수난과 불행에 깊은 동정을 표시하면서 리인모선생을 하루빨리 집에 돌려보내여 가족들과 만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리인모선생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한 개인과 한 리산가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갖은 풍파끝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악의 상태에서 인생말년을 외로이 보내고있는 한 인간과 그 가족들의 운명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문제이고 같은 동포로서 혈육에 대한 사랑과 의리에 관한 문제이며 인간으로서의 량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리인모선생과 그의 가족이 겪고있는 가슴아픈 정상을 외면하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리산가족문제를 거론한다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진실한것으로 리해될수 없을것입니다.

리인모선생을 돌려보내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좋을것이고 북남합의서의 리행에도 긍정적작용을 하게 될것이며 우리로서도 이것을 귀측의 선의의 표시로 좋게 받아들일것입니다.

리인모선생을 돌려보내는것은 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로 볼때 더이상 지체시킬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귀측이 이번 제 7 차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리인모선생의 송환문제에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며 오늘 회담에서 그에 대해 합의를 이룩하여 내외인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게 되기를 희망하는바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거듭 촉구하고있는 문익환목사와 림수경학생을 비롯한 방북인사들의 석방문제도 빨리 해결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남합의서가 채택되어 쌍방이 다같이 화해하기로 약속하였고 합의서가 실천적인 리행단계에 들어선 조건에서 귀측이 그들을 더이상 가두어둘 하등의 리유와 명분이 있을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귀측이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화해를 지향하는 오늘의 새로운 환경에 상응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익환목사와 림수경학생을 비롯한 방북인사들이 늦어도 올해 8.15이전에 반드시 석방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특례사업으로 제기하려고 하는것은 로부모방문단과 예

술단 교환문제를 성사시키자는 것입니다.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려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이로부터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리산의 한 세대가 다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는 흩어져 사는 가족, 친척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최근에도 협력, 교류분과위원회 회의들에서 부속합의서 토의를 제정된 기한내에 마무리짓고 인도주의문제들을 쌍방적십자단체에 넘겨 그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도록 노력하여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변함없을것입니다.

그러나 협력, 교류분과위원회에서 흩어져 사는 가족, 친척들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을 요하는것만큼 이와는 별도로 우리는 북남합의서가 채택되고 리행단계에 들어선 이 마당에 와서 온 민족에게 기쁨을 주고 흩어져 사는 가족, 친척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쌍방적십자단체에 권고하여 로부모방문단을 예술단과 함께 서로 교환하는 사업을 조직하여 합의서리행의 첫 선물로 민족앞에 내놓자는것을 귀측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로부모방문단과 예술단의 규모는 로부모 100명, 예술단 70명으로 하며 그 교환시기는 8.15광복절을 계기로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문제는 쌍방적십자단체들사이에서 협의해결하게

하면 될것입니다.

로부모당문단을 교환하는 문제는 귀측에서도 제기한 바 있고 1985년도에 쌍방사이에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을 교환한 전례도 있었던만큼 우리는 귀측이 우리의 제의에 기꺼이 동의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합의가 이룩되면 이번 제 7 차회담에서 쌍방사이에 8.15를 계기로 예술단과 로부모방문단을 교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하였다는것과 이 문제를 적십자단체들에서 실무적으로 맡아 처리하도록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를 발표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제안은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립장의 또하나의 뚜렷한 표시로 됩니다.

리인모선생이 송환되고 구속된 방북인사들이 풀려나오며 로부모방문단과 예술단이 교환되게 되면 북남사이에선 전례없는 화해의 분위기가 뜨겁게 흘러넘치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남합의서가 좋은 환경에서 더 잘 리행되어 평화와 평화통일의 날도 그만큼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남측대표 여러분!

내외의 기대와 관심 속에 막을 올린 우리 고위급회담은 이번까지 일곱번째에 이릅니다.

이 기간 쌍방대표들은 평화통일의 리정표로 될 력사적인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탄생시킨것을 비롯하여 겨레앞에 실로 큰일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북남합의서가 리행단계에 들어선 지금 우리들앞에는 더욱더 어려운 과제가 나서고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것인가 하는것은 6차회담으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두달반동안의 회담사업총화가 잘 말해주고있습니다.

원래 말보다 실천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더구나 북남합의서를 리행하는 문제로 말하면 나라가 분렬되여 근 반세기동안이나 쌓이고 쌓인 북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평화통일의 국면을 열어 나가는 중대한 민족사적사업이고 그 길이 모든것을 하나하나 새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초행길인만큼 많은 애로와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나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어차피 거쳐야 할 일이므로 우리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 뚫고나갈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우리 쌍방대표들의 어깨에 지워져있습니다.

대결의 당사자로 되여온 당국자들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선도자로서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지체시키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이제와서 뒤로 물러서려고도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이 사는 길이고 번영하는 길이며 우리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치는 영광된 길입니다.

쌍방은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다그침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하루라도 앞당겨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나는 제 7 차 고위급회담이 상정된 모든 문제들에서 훌륭한 결실을 이룩함으로써 북남합의서리행의 첫걸음을 빛나게 장식하며 온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과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는 의의있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본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남(수석대표) : 이상으로 쌍방의 기초연설을 다 잘 들었습니다.

이 본회담이 끝난 이후에 대표접촉을 갖자는 우리측 제안이 있었습니
다만, 귀측에서도 본회담후에 대표접촉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기에, 바로
본회담후에 오후에라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명시된 남북
연락사무소와 공동위원회 발족운영에 관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양측
대표접촉을 가지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단장) :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바이기 때문에 오후부터 대표접촉을
통해서 협의를 마저 하기로 합니다.

남(수석대표) : 예,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뭐 괜찮으시겠죠? 바로 본회담을
마치고 오후에 역시 대표접촉을 통해서 이번에는 꼭 이행기구를 발족시
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남북이 각각의 기초연설을 통해서 기본입장을 충분히 다 밝혔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회담에 대한 그런 온 겨레의 기대와 또 그
들의 소망에 부응하기위해서는 먼저 우리 쌍방대표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

는 의지가 이번 회담에서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간도
됐기 때문에 제 7 차.....

북(단장) : 저 그렇게 합시다. 그저 제 6 차 회담 이후 분과위원회별 회담 놓
고 많은 사람들이 그 7 차 회담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떡하나
협의를 잘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합시다.

남(수석대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 7 차 남북고위급 회담 제 1 일회의를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단장) : 수고하셨습니다.

남(수석대표) : 그리고 저 구체적인 시간하고 장소는 책임연락관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쌍방대표 인사교환후 퇴장>

第 2 日 會 議 錄

나. 제 2일 회의록

〈쌍방대표 입장 및 인사교환〉

남(수석대표) :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북(단장) : 어제 뭐 쌍방 대변인들과 분과위원장들이 이틀밤 동안 자지 못하면서 많은 고생들 했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남(수석대표) : 수고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북(안병수) : 보람있는 일이죠.

남(수석대표) : 아, 그렇죠. 우리 안선생 표현이 적절합니다. 비록 좀 잠은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보람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피곤치가 않습니다.

북(단장) : 예, 그렇게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얻어 왔습니다.

남(수석대표) : 오늘 아침 비가 좀 많이 내리구 있구, 또 우리 거의 전국적으로 바람도 좀 어제 강하게 불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직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데.

북(단장) : 뭐 피해본 건 없겠지요?

남(수석대표) :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데 제주도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좀 침수 됐다가 뭐 아침에 다 물이 빠졌다구 그러니다마는 그렇게 큰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는 비는 우리 농사에는 아주 좋은 거죠.

북(단장) : 그래, 농사에는 좋죠, 아주, 아주 좋죠.

남(수석대표) :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오늘은 사실은 북측대표들을 저 용인

에 있는 자연농원에 안내를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연농원이 아주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

그런데 이 비가오면, 물론 오후까지는 기다려 보기는 하겠습시다마는 필경 아마 일정을 좀 변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다시 또 의논드리겠습시다마는 못가게 되면 할 수 없이 여기서 무슨 영화를 관람 하거나 하는 걸로 오후시간을 좀 편히 쉬시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북(단장) : 예, 좋습니다.

남(수석대표) : 특히 뭐 그렇게 머리 아픈 영화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는 영화가 「사의 찬미」라고 해서 옛날 1920년대에 왜 그 윤심덕이라는 가수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담은 좀 아주 달콤한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나 좀 보시던지 그건 뭐 형편대로 했으면 좋겠습시다마는.

지금 일기같아서는 용인자연농원에 가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기아」에 갔다 오시는데도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비가 많이 좀 와가지고?

북(단장) : 아, 예. 어제 뭐 강강수월래 가무 구경을 잘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남(수석대표) : 아, 예.

북(단장) : 그 「수월래」란 「술래」란 것을 해명을 했습디까? 왜 「술래」라는

지?

남(수석대표) : 예, 저두 똑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우리가 들을때는 「강강수월래」 그랬는데.

북(김광진) : 본래 우리는 지금도 「수월래」라 하지요?

북(안병수) : 「수월래」라고 그러니까.

남(수석대표) : 「수월래」라고 그랬죠?

북(안병수) : 예.

남(수석대표) : 그런데 지금 그걸 줄여서 「술래」라고 그냥, 「강강」이란 말은 오랑케 얘기고.

북(단장) : 오랑케죠, 오랑케라는…….

남(수석대표) : 오랑케를 잡는 그런 「술래」다. 그래서 이제 「강강술래」라는.

이번에 제가 조금만 양해하시면 배경을 설명드리면 금년이 우리는 춤의 해라 그래서 무용을 좀 진흥시키기 위한 그런 그 문화의 해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문화계 인사중에서 과거에 있었던 분을 한 분 지목을 해서 가령 이달은 신사임당의 달입니다. 신사임당이라면 율곡 선생의 바로 어머니 되시고 또 정말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는 다재다능했을 뿐만아니라 아주 모범적인 그런 어머니였고 율곡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을 배출했다는 그 자체가 높이 평가될만 해서 많은 분들의 숭상의 대상이 됩시다라는 이달이 지금 신사임당의 달입니다.

그리고 금년이 춤의 해가 돼서 이번에 국립무용단이 특별히 그 춤을 조금 현대화도 하고, 우리민족이 이땅에 정착해서 평화스럽게 살다가 외

세의 침범도 받고 그걸 물리치는 고통도 겪고 뭐 그런 내용을 담은 일종의 춤입니다마는.

그걸 어제 비교적 우리가락을 중심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두 어제 처음 봤습니다마는.

북(단장) : 처음 봤습니까?

남(수석대표) : 예.

북(단장) : 민족 문화예술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족성을 살리는 문제, 이거 아주 중요한 거 같습니다.

남(수석대표) : 예. 아마 어제 다 와 보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바로 그 춤, 또 우리 민족 그 예술이라는 면에서는 남북이 상당한 정도의 어제 공통점이 있었던 것으로, 아마 공통적인 인식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북(안병수) : 그럼요. 한 민족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 문화 바탕도 다 같죠.

남(수석대표) : 오늘 좀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제 회의를 마저 시작을 했으면 합시다만 괜찮겠습니까?

북(단장) : 예. 그렇게 합시다.

남(수석대표) : 지금부터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제2일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보도기관에서는 좀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우리측 대표들이 수석대표에게 금일회의가 공개회의임을 전달)

그러면 먼저 제가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귀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있었던 대표접촉과 또 분과위원장 접촉을 통해서 합의한 남북연락사무소 및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를 낭독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군사분과위원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 순으로 각 분과위원장이 합의를 낭독하고 상호 확인한 후에 쌍방 총리가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의 낭독순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를 귀측이 먼저 낭독한 후 우리측이 낭독을 하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우리측이 먼저 낭독한 후에 귀측이 낭독을 하고,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귀측이 먼저 낭독한 후에 우리측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교환이 끝난후에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담은 제7차 고위급회담 합의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난후에 끝으로 귀측이 먼저 폐회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측이 폐회발언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대략 이런 순서로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만, 어디 괜찮겠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북(단장) : 거래의 기대와 관심속에서 진행되어온 이번 7차회담에서 북남 연락사무소 설치·운영문제, 군사, 협력교류분야에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그리고 예술단 및 노부모 방문단 교환문제에 대해서 어제 쌍방이 완전한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에 이제 정총리 선생이 제기한 순차대

로 합의된 문건에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남(수석대표) : 예. 좋습니다.

어제 실은 양측이 기초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합의서에 합의된 사항을 실천해야겠다는 의지를 다 밝힌 바는 양측이 다 있었습시다만,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회담에 임할 때는 다소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회담에 임했던 거는 사실입니다만, 이번 대표접촉과 분과위원장 접촉을 통해서 쌍방이 정말 호양의 정신을 발휘하고 반드시 기본합의서에 합의된 내용을 실천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완전합의를 이루게 된 것은 무척 기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쌍방의 분과위원장과 대표들이 무척 많은, 밤을 새가면서 노력해 주신것을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귀측에서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북(단장) : 그렇게 합시다.

남(수석대표) : 그러면 이제부터 각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합의서에 대한 서명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방 군사분과위원장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측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김영철) : 그럼 제가 먼저 쌍방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합의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원문을 읽겠습니다.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북남사이의 불가침을 리행, 담보하고 군사적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북남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부장급(차관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 ③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불가침의 리행과 준수 및 담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협의한다.

- ② 불가침의 리행과 준수 및 담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필요한 합의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 ③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 ④ 우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 감독한다.

제 3 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평양, 서울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③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래왕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담보,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에서의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이상입니다.

남(수석대표) : 예. 수고했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우리측에서 박용옥위원장이 우리측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박용옥) : 지금부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를 낭독하겠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 ③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다.
- ②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 ③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 ④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한다.

제 3 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

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③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에서의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석대표) : 이상 쌍방의 낭독이 끝났습니다. 뭐 이의 없으시겠죠?

북(단장) : 예. 서명합니다.

남(수석대표) : 예. 그러면 서명하죠.

〈쌍방 합의서 서명 및 교환〉

남(수석대표) : 이것으로써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교류·협력분과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측 임동원 대표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임동원) :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실천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이상입니다.

남(수석대표) : 예. 다음에는 귀측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단장) : 김정우위원장이 낭독하시죠.

북(김정우) :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 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리행을 위하여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북과 남은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북남경제협력, 교류공동위원회》와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부장(장관) 또는 부부장(차관)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리행한다.
- ②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리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 실천한다.
- ④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 조정한다.

제 3 조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평양, 서울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협력, 교류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래왕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담보,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체들의 회의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 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북남고위급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 장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한 민 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국무총리 정원식

이상입니다.

남(수석대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의 없으시겠죠?

북(단장) :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서명합시다.

〈쌍방 합의서 서명 및 교환〉

남(수석대표) : 이것으로써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쌍방 정치분과위원장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귀측에서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단장) : 백남준 위원장이 읽으시오.

북(백남준) : 제가 합의서 읽겠습니다.

북남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제 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북남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 2 조 북과 남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 3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연락사무소는 북과 남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대표들로 구성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대표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내올수 있다.

제 4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위임에 따라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 ② 위임에 따라 북남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 ③ 북남사이의 각종 래왕과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보장한다.
-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 5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과 접촉을 가진다.
연락사무소 성원들사이의 관계는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 ③ 자기측 지역을 래왕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성원에 대하여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자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식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식일로 한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이상입니다.

남(수석대표) :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측에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동복대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동복) : 남측에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 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 3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에서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 ②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 ③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 5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과 접촉을 가진다.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 ③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식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식일로 한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 총리 연형묵

이상 낭독 끝냈습니다.

남(수석대표) : 이상 낭독한 합의서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겠죠?

북(단장) : 예. 수표합시다.

남(수석대표) : 서명합시다.

〈쌍방 합의서 서명 및 교환〉

남(수석대표) : 이것으로써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합의서에 대한 서명·교환 절차를 마쳤습니다.

폐회발언에 들어가기전에 남북쌍방이 합의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을 보고 받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측에서 합의문을 낭독하고 다음에 귀측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대표!

남(이동복) : 낭독하겠습니다.

제 7 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에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들의 성과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남북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기구에 관하여 다음사항에 합의하였다.

- ① 남북화해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 ③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킨다.
2. 남북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1992년 5월 18일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구성원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3.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18일자로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할 남북연락사무소 자기측 소장과 부소장 및 연락관들의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무소 운영을 개시한다.
 4. 불가침 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1일까지 작성하고,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5일까지 작성한다.
 5. 남북합의서 이행에 대한 첫 선물을 민족앞에 내놓으려는 염원에서 올해 8·15 해방 47돌을 계기로 각기 노부모 100명과 예술인 70명, 그리고 70명의 기자·지원인원들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하도록 쌍방 적십자단체들에 위임한다.
 6. 각 분과위원회와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의 다음번 회의날짜와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4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 12일(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 ② 제4차 남북정치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19일(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 ③ 제4차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25일(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 ④ 제4차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30일(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7.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1992년 5월 7일

서 울

이상 낭독을 끝냈습니다.

남(수석대표) : 귀측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단장) : 안병수대변인이 낭독해 주세요

북(안병수) : 예.

제 7 차 북남고위급회담 합의문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이 1992년 5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들의 사업을 진지하게 협의

하였다.

회담에서는 북남군사공동위원회,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북남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회담에서 쌍방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 제1장 북남화해분야의 이행기구에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합의하였다.
 - 1) 북남화해분야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북남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2) 북남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 3)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 이전에 북남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북남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킨다.
2. 북남군사공동위원회, 북남경제협력, 교류공동위원회,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공동위원회를 1992년 5월 18일에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성원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3.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하게 될 북남연락사무소의 자기측 소장과 부소장 및 연락관들의 명단을 5월 18일에 서로 상대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무소 운영을 개시한다.
4. 불가침 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1일까지 작성하고, 협력·교

류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5일까지 작성한다.

5. 북남합의서 이행에 대한 첫 선물을 민족앞에 내놓으려는 염원에서 올해 8·15 해방 47돛을 계기로 각기 노부모 100명과 예술인 70명, 그리고 70명의 기자, 보장성원들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교환하도록 쌍방 적십자단체들에 위임한다.
6. 각 분과위원회와 북남해통제공동위원회의 다음번 회의날짜와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북남해통제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는 1992년 5월 12일에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 2) 북남정치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는 1992년 5월 19일에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 3) 북남군사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는 1992년 5월 25일에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 4) 북남협력·교류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는 1992년 5월 30일에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7.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1992년 5월 7일

서 울

남(수석대표) :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낭독한 이번 제7차 고위급회담 합의문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북(단장) : 예.

남(수석대표) :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종결짓는 폐회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측에서 폐회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단장) : 제가 하겠습니다.

〈북측 결속발언〉

정원식총리와 남측대표 여러분!

은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세계의 관심속에서 열린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은 오늘로서 자기 사업을 마무리짓고 이제 곧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회담은 제6차 평양회담에서 발효시킨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한 지난 3개월동안의 사업을 교훈적으로 총화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관한 쌍방의 합의물 실천에로 이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한 의의있는 회담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쌍방은 북남군사공동위원회와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북남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킴으로써 이제 10여일안에 공동위원회들을 구성하여 북남합의서를 실천에 옮겨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놓았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쌍방은 북남합의서 화해부문의 합리리행을 위한 《북남화해공동위원회》를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이전에 발족시킬데 대해서와 불가침부문의 부속합의서를 9월 1일까지 작성하고 협력, 교류부문의 부속합의서를 9월 5일까지 작성하며 화해부문의 부속합의서를 제8차 회담이전에 작성할데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특례로 8·15해방 47돐을 계기로 예술단과 함께 로부모방문단을 동시에 교환할데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북남합의서를 리행하는 길에서 귀중한 첫 선물을 민족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향하여 또 한걸음을 크게 내디디었습니다.

이번 제7차 회담에서 이룩된 성과는 북남쌍방이 이미 발효된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드팀없이 리행할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8·15해방 47돐을 계기로 로부모방문단과 예술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은 실천단계에 들어선 우리 고위급회담의 새로운 면모를 내외에 과시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이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제6차 회담을 기점으로 하여, 북남사이의 화해와 완화와 통일에로의 첫

걸음을 내디딘 우리의 발걸음은 비록 속도는 더디고 로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겨레의 기대와 '청원속에 밝은 전망을 내다보며 앞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민족에게 력사의 새언덕에서 90년대 통일의 지평선을 내다볼 수 있게 하는 또하나의 고무적인 사태발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지금에 만족할 수 없으며 하루빨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잃어버린 단일민족의 슬기로운 력사를 되찾기 위해 더욱 힘있게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통일여로의 진군길을 다그치자면 북과 남이 다같이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7·4공동성명과 더불어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되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의 합의문서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도 북과 남의 우리들이고 그 리행을 담보한 주인도 북과 남의 우리들인것만큼 철저히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온 민족의 리익에 복종시켜나가면서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실천해나가는 것이 오늘도 래일도 우리 쌍방대표들이 일관하게 지켜야 할 립장이고 다해야 할 책임입니다.

민족적단합과 통일여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고 전진하는 민족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안고있는 우리 쌍방대표들의 활동에 대한 겨레의 기대는 매우 큼니다.

우리 쌍방은 민족과 시대가 준 자기의 책무를 자각하고 이미 합의한대로

《북남화해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각 공동위원회가 집행할 부속합의서들을 마저 완성함으로써 모든 공동위원회들을 조속히 운영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목과 대결의 과거와 결별하기로 내외에 확약한 북과 남은 이제 더는 서로 《적》이나 《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단합과 통일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다짐한 동족으로서 응당 서로 힘을 합쳐야 하며 오직 통일에 리로운 일만 하여야 합니다.

넓게 열린 통일의 길이 이제 다시 가로막혀서는 안됩니다.

우리모두는 회담이 전진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적극적인 실천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앞길을 끊임없이 넓혀나가야 합니다.

남측대표 여러분!

지금 온 민족은 물론 세계가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 선언이 전면적으로 리행되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이 하루빨리 앞당겨 이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북과 남이 다같이 통일의 립장에서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대하고 그것을 성실히 리행한다면 우리들은 의심할 바 없이 오늘 보다 더 의의 있는 선물을 겨레앞에 내놓게 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9월에 있을 제8차 회담때 정원식총리를 비롯한 남측대표여러분들과 평양에서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면서 이상으로 제7차 북남고위급 회담의 결속발언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수석대표) :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측에서 폐회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측 폐회발언〉

연형묵 총리!

그리고 북측대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온 겨레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먼저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이 다같이 호양의 정신을 발휘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준수해 나갈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을 온 겨레와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과 북은 오늘 남북기본합의서에 설치시한이 명시되어 있는 남북연락사무소와 군사공동위원회, 그리고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를 각각 서명·발효시켰습니다.

귀측도 아다시피 그동안 진행되어온 분과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활동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스러운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제7차 고위급 회담이 열린 관계로 우리 쌍방대표들의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북쌍방은 기본합의서에 발족시한이 명시된 기구들의 구성·운

영에 관한 합의서가 이번 회담에서 채택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데 이어,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통해 이처럼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북기본합의서의 리행을 위한 또하나의 귀중한 결실을 거듭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쌍방의 실천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진전은 남북사이에 화해와 평화와 협력을 향한 실천적 노력을 본격화하는 것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우리 겨레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측대표 여러분!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이행기구 구성문제에서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소를 계기로 이제 쌍방 사이에 연락과 협의를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남북간에 앞으로 많은 인적·물적 왕래와 협력, 우편통신의 연결 그리고 각종 회의와 접촉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단절된 남북사이에 새로운 가교를 놓고 끊어진 혈맥을 이어주는 촉매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사공동위원회가 발족되면 상호 불가침의 이행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며, 한반도 평화정착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나는 군사공동위원회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능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남북간에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고 단계적 군축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발족되면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물론 인적 왕래와 통행·통신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입니다.

남북간에 사람과 물자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여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고 민족적 유대감과 동질성을 회복한다면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처럼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이행기구들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의서에 담겨진 정신에 부합되도록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위원회와 남북연락사무소는 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쌍방 수석대표의 지도·조정 아래 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겨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5월 18일까지 구성되는 이행기구들이 화해와 협력의 문을 여는 가시적 사업들을 착실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대로를 닦아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측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행기구들을 탄생시키게 된 것은 꽤 경하스러운 일이지만 이로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으며, 가야 할 길도 결코 가깝지 않은 않습니다.

민족의 평화와 번영은 통일의 대로이며, 민족을 하나로 묶는 요체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단절과 불신의 잔재로부터 벗어나 서로 돕고 협력하여 민족의 긍지와 자존을 드높이는 큰 모습으로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국제경쟁시대에서 우리가 과거의 대결관계를 지속하는 한 우리는 또다시 세계사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지난 한세기의 역사가 일러 주듯이 힘이 없이는 진정한 자주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주가 국제사회로부터의 폐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선조들의 쇄국정책이 우리 민족사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상기해 보면 자명해 질 것입니다.

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바로 우리민족의 자주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스스로 통일과 번영의 민족사를 이룩하자는 것을 굳게 다짐한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화는 밖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가 공고한 평화상태를 적극 만들어 나갈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온 겨레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마음의 화해부터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화해는 민족의 대단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상대방 정부의 권위와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이를 파괴·전복하는데 앞장서려 한다면 민족대단결은 처음부터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책임있는 쌍방 당국간에 정식으로 발효되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도 대결시대의 남북관계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형태를 반복한다면 온 겨레에게 큰 실망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민족대단결은 말 그대로 민족전체의 단합을 도모하는 공통의 분모를 넓히는데서 찾아야 하며,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한 정치선동으로는 결코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대국적 차원에서 깊이 인식하고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역동의 세기를 열어 주어야 할 사명을 다시한번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측대표 여러분!

남북기본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실질적 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의 작업은 우리가 계속 서둘러야 할 과업중의 하나입니다.

쌍방간에 우선 합의 가능한 것부터 부속합의서로 작성하고 미합의사항이나 새로이 발생하는 사항은 쌍방 협의를 통해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이번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반드시 협의·해결해야 할 과제인 남북상호핵사찰 문제에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쌍방이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킨데 이어 오늘 그 이행 기구의 발족까지 합의한 만큼 한반도 평화정착에 가장 기본적이고 긴급한 과제인 상호핵사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귀측은 응당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거나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넘길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결코 아니며, 책임있는 쌍방 당국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하고 중대한 민족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나는 이번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8·15 광복절을 기해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실현하기로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를 계기로 하여 이산가족 문제가 전면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측대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실천단계에 들어감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하루를 열흘처럼 불철주야 노력한 쌍방대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양에서 열리게 될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두어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온 강토에 넘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남은 기간 북측대표단 여러분의 여정이 즐겁고 뜻깊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온 거래의 염원을 모아 회담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뒤에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단장) : 수고했습니다.

남(수석대표) : 그러면 이것으로 폐회발언을 마치고 이번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괜찮겠죠?

북(단장) : 예. 좋습니다.

남(수석대표) : 그러면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 제2일 회의를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단장)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쌍방대표 인사교환 후 퇴장〉

〈附錄 1〉

雙方代表團 聲明 및 記者會見

— 〈目 次〉 —

1. 北側 代表團 代辯人 서울到着 聲明(5. 5) 115
2. 北側 代表團 代辯人 記者會見(5. 6) 118
3. 우리側 代表團 代辯人 記者會見(5. 6) 135
4. 우리側 代表團 代辯人 記者會見(5. 7) 147
5. 北側 代表團 代辯人 서울出發聲明(5. 8) 156

1. 북측 대표단 대변인 서울도착 성명

* 일시 : 1992. 5. 5 (화), 12 : 12~12 : 18

* 장소 : 신라호텔 (1층) 기자회견장

* 발표 : 안병수 대표

〈성 명 문〉

서울시민들과 남녘의 동포들!

내외기자 여러분!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은 우리 대표단일행을 혈육의 정으로 반가이 맞이해준 서울시민들과 남녘의 동포형제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면서 평양시민들과 북녘형제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단은 역사적인 북남합의문건들이 발효된 이후 거래의 통일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네번째로 방문하게 됩니다.

평양에서 있었던 지난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민족공동의 합의문건들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들의 회담은 바야흐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근 반세기동안 지속되어 오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장을 펼쳐나가며 전쟁과 분열을 막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밝

은 전망을 열어나가는 력사의 새 언덕에 올라섰습니다.

이번의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은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래일을 여는 실천단계의 첫 회담으로서 이번 회담이야말로 민족과 세계앞에 쌍방의 통일 의지를 생동한 현실로 보여주고 합의문건들의 력사적의의와 의심할바 없는 무게를 내외에 확신시키는 중대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으로부터 그리고 겨레앞에 훌륭한 회담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부터 우리는 쌍방대표단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북남합의문건들의 성실한 리행을 위하여 그동안 모든것을 다해온 우리 북측대표단은 무엇보다 먼저 이번 회담이 합의문건들의 실천을 강력히 촉진하는 추동력이 되도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화해와 평화와 협조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오늘 쌍방대표단은 서로의 뜻과 지혜를 합쳐 합의문건들의 전면적 리행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합의문건들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에 옮겨 지지 않을 때에는 나라와 평화와 통일에 아무런 의의도 없을것입니다.

쌍방대표단은 그동안 분과위원회 회의들에서 걸리고 있던 문제들을 대범하게 풀어나가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회담에 립함으로써 합의문건들의 실천을 강력히 추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측대표단은 이번에 부속합의서들과 집행기구들의 탄생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합의문건들을 전면적으로 리행할수 있는 튼튼한

골격을 마련하도록 할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번 제7차 회담이 리행 단계에 들어선 회담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지금 온 거래는 귀로 듣기만 하는 화해와 평화보다 온몸으로 느낄수 있는 화해와 평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의 이 간절한 소망을 풀어줄때는 왔습니다.

쌍방대표단은 이번 회담이 실천단계에서 열리는 회담답게 온 민족이 몸으로 느낄수 있는 실천적결과를 가져오도록, 합의문건들이 실제적으로 온을 내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대표단은 이번 제7차 회담에서 거래의 요청에 화답할 수 있는 새로운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성의를 다할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들의 회담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는 남녘의 동포형제들이 합의문건들의 성실한 리행을 위한 우리의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2. 북측 대표단 대변인 기자회견

* 일시 : 1992. 5. 6 (水), 12 : 15~12 : 52

* 장소 : 신라호텔 (1층) 기자회견장

* 발표 : 안병수 대표

〈기자회견문〉

기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날회의가 공개회담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이 쌍방의 기본발언 내용을 다 이제 충분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몇가지 요점에 대해서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번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 참가하면서 우리 북측대표단은 대단한 의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회담에 참가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은 쌍방 대표단이 지난 제6차 회담에서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그걸 발효시킨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런 회담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실천단계에 들어서서 첫번째로 열리는 이런 회담이다. 지금 그런 것 만큼 내외에서 이 7차회담에 대한 관심, 기대는

대단히 높고,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외의 그런 기대화 관심, 또한 우리 자체가 민족앞에 지니고 있는 책임감, 쌍방이 합의서 앞에 지니고 있는 그런 책임감, 그런 것을 느끼고 이번 제7차 회담에서는 역시 절대로 담보나 퇴보를 해서는 안되고 계속 전진하며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회담으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이번 7차회담이 6차회담이후 진행된 분과위원회들에서 토의된 내용들, 거기에서 걸리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을 그야말로 한 칼에 낱말을 자르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시원하게 타결을 짓고 이번 회담이 그야말로, 앞으로의 사업을 확 밀어주자, 추동력으로 되게 하자, 이게 우선 우리가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북남고위급회담이 실천단계에 들어선 이상 우리가 절대로 이 회담이 그저 공리공담이나 하고 추상적인 얘기나 주고받는 이런 원칙론적인 얘기나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 민족이 실지로 이 합의를 받아 안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느낄수 있는,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 무엇올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어야 하겠다 하는 이런 우리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 7차회담에 립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7차 북남고위급회담에 대한 우리의 각별한 의욕적인 이런 자세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제7차회담 첫날 회의에서 우리 북측 대표단이 중요하게 역점을 둔 사항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째로는 지난 6차회담 이후 오늘까지 두달반 동안의 사업을, 분과위원회들의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타가 지금 남측에서도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만족할만한 정도로 진척은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 책임을 구태여 묻자는 것이 아니라, 회담 과정에는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는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수 있고 또 그것을 절충하노라면은 우리가 예정된 시간 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정도 회담이 조금 다소 지연되는 것은 허용될수 있고 서로간에 이해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강조해서 말씀드릴것은 전혀 타당치 않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사유를 가지고서 인위적인, 적지않게 고의적인 이런 지연, 이런 전술이라고 하겠는지 하여간 지연시켜서는 안되겠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번 총화에서 많이 느낀 문제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 핵사찰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번 7차회담을 하기전에 남측에서는 정부당국의 협의회에서 핵사찰을 북에서 빨리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에서는 합의서 이행을 보류한다는 것이 방침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걸 다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또 관계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언명을 했습니다. 핵사찰 이거를 빨리하지 않으면은 합의서 이행도 보류한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됐는가하면 이 합의서, 앞으로 이 합의서 이행도 엄중한 위협에 부닥칠것이다. 이렇게까지 이 분과위원회들에서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핵사찰 문제를 우리가 이 회의 마당에서, 북남고위급회담 마당에 와서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제기할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북남합의서 이것을 채택, 발효했을 당시에 우리 쌍방사이에서는 핵사찰 문제가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또 그것이 전제조건으로 될 수도 없지요. 전제조건으로 되면 합의서가 채택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원래 전혀 이게 천부당 만부당하다 그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기여코 내세우자고 한다면 옹당히 북남 합의서 쌍방이 도장을 누르기 전에 이 문제를 내세우고 이것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합의서 도장 못누르겠다. 이렇게 되어 원래 순리죠.

그러나 일단 합의서에 다 도장 누르고 이행단계에 들어서고 발효가 다 돼서 이런 사후에 와서 핵사찰이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전 결코 순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 핵사찰 문제를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원래 이 핵사찰 문제를 남측에서 이게 무슨 국제원자력기구와 우리 공화국과의 호상관계, 이런 국제사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북간의 호상사찰을 염두에 두고있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명백치 않습니다. 그게 우리 두가지 다 어느 측면을 봐도 이게 정확하진 않다, 그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국제사찰을 놓고 봅시다. 국제사찰에 대해서 놓고 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벌써 핵안전 담보협정에, 이 대화기간에 벌써 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

기 제3차 회의에서 이 담보협정에 공식 비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 지금 국제원자력 기구와는 아무런 마찰과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지금 핵사찰을 받기위한 공정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디까지나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와 우리와의 관계 문제이지 여기에서 어떻게 남측에서 이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회담에 들고 나올수 있겠느냐? 원래 이 문제는 여기서 간참할 문제도 못된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간의 사찰을 염두에 뒀다고 합시다. 이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를 놓고 말하면은 지금 우리는 벌써 몇달전에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라는 것이 발족이 돼서 벌써 수차 지금 회담을 했습니다. 핵통제공동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여기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과 남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행하겠는가 하는, 여기 핵사찰까지도 포함해서,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사찰 규정까지도 지금 상정이 돼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게 아닌데 어떻게 핵사찰을 전제조건으로 여기와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얘기하는가 하는거예요.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다 토의가 순조롭게 되면은 그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것은 다 순조롭게 될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회담에서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다면은 역시 이것도 옳지않은 것이다. 저희들은 이런 견지에서 핵사찰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오고 바로 이것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분과위원회 사업이 적지않게 지장을 받아온 사실에 대해서 남측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번 총화하면서 저희가 첫째로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릴겁니다.

다음 이번 총화에서 저희들이 두번째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지연이 먼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다만 협의상, 이런 방법상 이런 문제의 차이로 해서 지연됐다면 아무일이 없는데 상당히 여기 고의적인 고의성이 엿보인다 그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도 이렇게 당치 않은것을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서 핵사찰 문제를 전혀 근거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회담을 지연시키는 그 저의가 어디있는가? 이것을 우리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 저희는 그것을 여러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남측에서 여러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특히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장이 된, 피력된 이런 그 주장들을 우리가 놓고 볼때 여기에는 좀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것을 저희들이 간취했습니다.

그건 4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길게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미관계 문제, 하나는 국가보안법문제, 하나는 창구단일화문제, 하나는 반공체제 문제, 이 4가지 문제입니다. 남측에서는 이 4가지 문제를 염두에다 두고 주로 정치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그것을 좀 재가

속된 표현을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여간 회피하는 이런 인상을 적지 않게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미관계 문제를 실례로 든다면은 쌍방이 자주의 원칙을 합의한 것은 인정하고 서로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자주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자. 이걸 지금 쌍방에다 공동으로 인식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적 원칙에서 미군철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할때,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할때 그 외세라는게 무엇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우리 없어진 소련이겠습니까? 무슨 중국이겠습니까? 어느 다른 주변 나라겠습니까? 명백하죠.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조선문제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미국이라는게 이게 더 말할게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응당히 우린 물론 지금 당장 미군 다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안합니다. 이거는 이제 협의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미군을 철수시킬 그런 의향, 그런 단안을 응당히 내려야된다. 그러나 그렇게 할 대신 오히려 『미군은 자주의 원칙을 지키는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다. 거기에는 아무런 저촉도 없다. 미군은 전쟁억지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십쇼. 미군이 전쟁 억지력이라고 한다면 조선반도 평화문제가 미국의 남조선 주둔에 의해서 담보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나라의 평화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자주적인 노력을 원천적으로 이걸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조선반도의 평화를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주둔해 있어야만 보장이 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남북간의 무슨 자주적으로 평화노력을 할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주의 원칙을 곡해해서, 달리 이해해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미군, 대미문제 일정에 제기되고 있는 대미관계 문제를, 문제에서 석연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대미관계 문제가 가나 제기돼요.

다음 국가보안법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도 역시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철폐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구태여 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그야말로 남측의 표현대로 말씀드린다면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남측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시대에 상응한 이런 조치들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자, 이 주장이 아주 지금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문제삼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최근에 법무부에서 북남합의서, 이미 채택된 북남합의서는 공동선언이나 신사협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도 없는거다. 공식적으로 이게 논의 됐습니다. 그 발표가 공개됐습니다. 이걸 아주 이 북남합의서, 이 귀중한 합의서에 대한 아주 그릇된, 잘못된 인식이며 곡해라고 이렇게 생각됨

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실천하자는 것이고 거기에는 일련의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사협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변동시킬 의지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이런 구시대적인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걸 우리가 유감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상응하게 우리 머리도 좀 돌리자 이거죠. 당장 철폐하라! 우리 이런겐 물론 안합니다. 이젠 물론 앞으로 토의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수할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런 새로운 이 추세에 맞게 우리가 이것을 재검토 하겠다는가, 없애겠다는가, 적어도 이런 자세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래서 이 문제를 얘기 하는 겁니다.

창구단일화 문제, 이 문제도 같습니다. 이 문제가 왜 제기됐는가? 남측에서 『자주성의 원칙이라는게 뭐냐? 그것을 구현하자면은 상대방의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 대표성을 인정하자고 하면은 정부와만 문제가 이렇게 협의 되야지 다른 사람하고 일체 관계를 가지면 안된다』 이겁니다.

여긴 논리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래 자주성이라는 이 개념, 자주성 자체가 이게 대표성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주성, 그와 대치되는건 예속입니다. 그거는 우리 외국과의 관계에서 호상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지 남북간의 관계에서 뭐 자주성 이렇게 문제를 새우는 건 아닙니다. 아, 무슨 북이 남에 예속되어 있습니까? 남이 북에 예속되

어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주성이라는게 대표성 문제로 이렇게 둔갑이 되는가? 이렇게 될수 없죠, 관계없습니다. 왜 이런 논리가 구차스러운 논리가 나오는가? 결국은 창구단일화를 옹호하자니까 이런 논리가 나온다 그말이야. 이렇게 해선 안되겠다.

역시 화해와 협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남북을 터놓고서 다니고 이런 시대를 만들자고 하면은 무엇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구는 다닐 수 있고 누구는 다녀서는 안되고, 누구는 접촉해서 되고 누구는 접촉해선 안되고, 이렇게 이중적인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겠는가, 규범을? 이렇게 해선 안되겠다.

특히 우리가 중요한것은 통일문제라는게 결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문제라는 것은, 통일문제란 어디까지나 민족문제이며 정치문제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당국과만 협의를 해서 딱 무슨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누구와도 얘기를 못하고서 이렇게 당국과만 해야 된다. 이런 견해는 그야말로 인민대중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창의적인 노력을 우리가 짓밟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력사적으로 보십시오.

오늘날까지 통일문제가 논의가 되고 즐기치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과를 통일문제가 전진해 온 그 력사적 과정을 놓고 보면은 사실상 당국이 한것

2. 북측 대표단 대변인 기자회견

* 일시 : 1992. 5. 6 (水), 12 : 15~12 : 52

* 장소 : 신라호텔 (1층) 기자회견장

* 발표 : 안병수 대표

〈기자회견문〉

기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날회의가 공개회담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이 쌍방의 기본발언 내용을 다 이제 충분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몇가지 요점에 대해서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번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 참가하면서 우리 북측대표단은 대단한 의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회담에 참가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은 쌍방 대표단이 지난 제6차 회담에서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그걸 발효시킨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런 회담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다면은 이제 실천단계에 들어서서 첫번째로 열리는 이런 회담이다. 지금 그런 것 만큼 내외에서 이 7차회담에 대한 관심, 기대는

대단히 높고,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외의 그런 기대화 관심, 또한 우리 자체가 민족앞에 지니고 있는 책임감, 쌍방이 합의서 앞에 지니고 있는 그런 책임감, 그런 것을 느끼고 이번 제7차 회담에서는 역시 절대로 담보나 퇴보를 해서는 안되고 계속 전진하며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회담으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이번 7차회담이 6차회담이후 진행된 분과위원회들에서 토의된 내용들, 거기에서 걸리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을 그야말로 한 칼에 낱말을 자르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시원하게 타결을 짓고 이번 회담이 그야말로, 앞으로의 사업을 확 밀어주자, 추동력으로 되게 하자, 이게 우선 우리가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북남고위급회담이 실천단계에 들어선 이상 우리가 절대로 이 회담이 그저 공리공담이나 하고 추상적인 얘기나 주고받는 이런 원칙론적인 얘기나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 민족이 실지로 이 합의를 받아 안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느낄수 있는,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어야 하겠다 하는 이런 우리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 7차회담에 립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7차 북남고위급회담에 대한 우리의 각별한 의욕적인 이런 자세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제7차회담 첫날 회의에서 우리 북측 대표단이 중요하게 역점을 둔 사항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째로는 지난 6차회담 이후 오늘까지 두달반 동안의 사업을, 분과위원회들의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타가 지금 남측에서도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만족할만한 정도로 진척은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 책임을 구태여 묻자는 것이 아니라, 회담 과정에는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는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수 있고 또 그것을 절충하노라면은 우리가 예정된 시간 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정도 회담이 조금 다소 지연되는 것은 허용될수 있고 서로간에 이해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강조해서 말씀드릴것은 전혀 타당치 않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사유를 가지고서 인위적인, 적지않게 고의적인 이런 지연, 이런 전술이라고 하겠는지 하여간 지연시켜서는 안되겠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번 총화에서 많이 느낀 문제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 핵사찰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번 7차회담을 하기전에 남측에서는 정부당국의 협의회에서 핵사찰을 북에서 빨리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에서는 합의서 이행을 보류한다는 것이 방침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걸 다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또 관계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언명을 했습니다. 핵사찰 이거를 빨리하지 않으면은 합의서 이행도 보류한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됐는가하면 이 합의서, 앞으로 이 합의서 이행도 엄중한 위협에 부닥칠것이다. 이렇게까지 이 분과위원회들에서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핵사찰 문제를 우리가 이 회의 마당에서, 북남고위급회담 마당에 와서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제기할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북남합의서 이것을 채택, 발효했을 당시에 우리 쌍방사이에서는 핵사찰 문제가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또 그것이 전제조건으로 될 수도 없지요. 전제조건으로 되면 합의서가 채택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원래 전혀 이게 천부당 만부당하다 그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기여코 내세우자고 한다면 옹당히 북남 합의서 쌍방이 도장을 누르기 전에 이 문제를 내세우고 이것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합의서 도장 못누르겠다. 이렇게 되어 원래 순리죠.

그러나 일단 합의서에 다 도장 누르고 이행단계에 들어서고 발효가 다 돼서 이런 사후에 와서 핵사찰이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진 결코 순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 핵사찰 문제를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원래 이 핵사찰 문제를 남측에서 이게 무슨 국제원자력기구와 우리 공화국과의 호상관계, 이런 국제사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북간의 호상사찰을 염두에 두고있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명백치 않습니다. 그게 우리 두가지 다 어느 측면을 봐도 이게 정확하진 않다, 그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국제사찰을 놓고 봅시다. 국제사찰에 대해서 놓고 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벌써 핵안전 담보협정에, 이 대화기간에 벌써 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

기 제3차 회의에서 이 담보협정에 공식 비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 지금 국제원자력 기구와는 아무런 마찰과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지금 핵사찰을 받기위한 공정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디까지나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와 우리와의 관계 문제이지 여기에서 어떻게 남측에서 이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회담에 들고 나올수 있겠느냐? 원래 이 문제는 여기서 간참할 문제도 못된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간의 사찰을 염두에 뒀다고 합시다. 이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를 놓고 말하면은 지금 우리는 벌써 몇달전에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라는 것이 발족이 돼서 벌써 수차 지금 회담을 했습니다. 핵통제공동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여기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과 남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행하겠는가 하는, 여기 핵사찰까지도 포함해서,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사찰 규정까지도 지금 상정이 돼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게 아닌데 어떻게 핵사찰을 전제조건으로 여기와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얘기하는가 하는거예요.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다 토의가 순조롭게 되면은 그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것은 다 순조롭게 될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회담에서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다면은 역시 이것도 옳지않은 것이다. 저희들은 이런 견지에서 핵사찰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오고 바로 이것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분과위원회 사업이 적지않게 지장을 받아온 사실에 대해서 남측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번 총화하면서 저희가 첫째로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릴겁니다.

다음 이번 총화에서 저희들이 두번째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지연이 먼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다만 협의상, 이런 방법상 이런 문제의 차이로 해서 지연됐다면 아무일이 없는데 상당히 여기 고의적인 고의성이 엿보인다 그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도 이렇게 당치 않은것을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서 핵사찰 문제를 전혀 근거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회담을 지연시키는 그 저의가 어디있는가? 이것을 우리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 저희는 그것을 여러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남측에서 여러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특히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장이 된, 피력된 이런 그 주장들을 우리가 놓고 볼때 여기에는 좀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것을, 저희들이 간취했습니다.

그건 4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길게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미관계 문제, 하나는 국가보안법문제, 하나는 창구단일화문제, 하나는 반공체제 문제, 이 4가지 문제입니다. 남측에서는 이 4가지 문제를 염두에다 두고 주로 정치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그것을 좀 제가

속된 표현을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여간 회피하는 이런 인상을 적지 않게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미관계 문제를 실례로 든다면은 쌍방이 자주의 원칙을 합의한 것은 인정하고 서로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자주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자. 이걸 지금 쌍방에다 공동으로 인식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적 원칙에서 미군철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할때,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할때 그 외세라는게 무엇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우리 없어진 소련이겠습니까? 무슨 중국이겠습니까? 어느 다른 주변 나라겠습니까? 명백하죠.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조선문제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미국이라는게 이게 더 말할게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응당히 우린 물론 지금 당장 미군 다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안합니다. 이거는 이제 협의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미군을 철수시킬 그런 의향, 그런 단안을 응당히 내려야된다. 그러나 그렇게 할 대신 오히려 『미군은 자주의 원칙을 지키는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다. 거기에는 아무런 저촉도 없다. 미군은 전쟁억지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미군이 전쟁 억지력이라고 한다면 조선반도 평화문제가 미국의 남조선 주둔에 의해서 담보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나라의 평화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자주적인 노력을 원천적으로 이걸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조선반도의 평화를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주둔해 있어야만 보장이 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남북간의 무슨 자주적으로 평화노력을 할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주의 원칙을 곡해해서, 달리 이해해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미군, 대미문제 일정에 제기되고 있는 대미관계 문제를, 문제에서 석연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대미관계 문제가 가나 제기돼요.

다음 국가보안법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도 역시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철폐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구태여 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그야말로 남측의 표현대로 말씀드린다면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남측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시대에 상응한 이런 조치들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자, 이 주장이 아주 지금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문제삼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최근에 법무부에서 북남합의서, 이미 채택된 북남합의서는 공동선언이나 신사협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도 없는거다. 공식적으로 이게 논의 됐습니다. 그 발표가 공개됐습니다. 이걸 아주 이 북남합의서, 이 귀중한 합의서에 대한 아주 그릇된, 잘못된 인식이며 곡해라고 이렇게 생각됨

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실천하자는 것이고 거기에는 일련의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사협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변동시킬 의지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이런 구시대적인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걸 우리가 유감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상응하게 우리 머리도 좀 돌리자 이거죠. 당장 철폐하라! 우리 이런겐 물론 안합니다. 이걸 물론 앞으로 토의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수할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런 새로운 이 추세에 맞게 우리가 이것을 재검토 하겠다는가, 없애겠다는가, 적어도 이런 자세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래서 이 문제를 얘기 하는 겁니다.

창구단일화 문제, 이 문제도 같습니다. 이 문제가 왜 제기됐는가? 남측에서 『자주성의 원칙이라는게 뭐냐? 그것을 구현하자면은 상대방의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 대표성을 인정하자고 하면은 정부와만 문제가 이렇게 협의 되야지 다른 사람하고 일체 관계를 가지면 안된다』 이겁니다.

여긴 논리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래 자주성이라는 이 개념, 자주성 자체가 이게 대표성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주성, 그와 대치되는건 예속입니다. 그거는 우리 외국과의 관계에서 호상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지 남북간의 관계에서 뭐 자주성 이렇게 문제를 새우는 건 아닙니다. 아, 무슨 북이 남에 예속되어 있습니까? 남이 북에 예속되

어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주성이라는게 대표성 문제로 이렇게 둔갑이 되는가? 이렇게 될수 없죠, 관계없습니다. 왜 이런 논리가 구차스러운 논리가 나오는가? 결국은 창구단일화를 옹호하자니까 이런 논리가 나온다 그말이야. 이렇게 해선 안되겠다.

역시 화해와 협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남북을 터놓고서 다니고 이런 시대를 만들자고 하면은 무엇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구는 다닐 수 있고 누구는 다녀서는 안되고, 누구는 접촉해서 되고 누구는 접촉해선 안되고, 이렇게 이중적인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겠는가, 규범을? 이렇게 해선 안되겠다.

특히 우리가 중요한것은 통일문제라는게 결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문제라는 것은, 통일문제란 어디까지나 민족문제이며 정치문제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당국과만 협의를 해서 딱 무슨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누구와도 얘기를 못하고서 이렇게 당국과만 해야 된다. 이런 견해는 그야말로 인민대중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창의적인 노력을 우리가 짓밟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력사적으로 보십시오.

오늘날까지 통일문제가 논의가 되고 줄기차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과를 통일문제가 전진해 온 그 력사적 과정을 놓고 보면은 사실상 당국이 한것

이 없었습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대결의 당사자로 돼왔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고위급회담 이전에는 아무것도 사실 기여한게 없었습니다. 당국에서야 사실 통일논의 자체를 금기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인민들은 각당 각파에서는 즐기치게 통일운동을 벌여왔어요. 이 통일의 주체입니다. 다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찌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에는 아무일도 못하던 우리 당국이 이제와서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다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하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느냐, 이렇게 될수 없다. 이것은 과거 통일운동에 대한 력사의 왜곡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들은 역시 이 창구단일화문제 여기에 절대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들, 많은 우리가 의사들을 듣고 민주주의적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이런 길이라고 우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다음에 반공체제 문제는 아까 국가보안법 문제하고 대동소이한 논리기 때문에 제가 그건 여기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지난 시기 대화, 이번 두달반 동안에 걸치는 이 분과위원회 사업을 총화하면서 들쭉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강조한게 이상 요 문제입니다, 4가지 문제.

다음 기본문제에 들어가서 우리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이번 제7차 회담에서 분과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걸리고 있는 문제들,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한 칼에

날말을 자르는 이런식으로 요번 고위급회담에선 짝 풀어서 길을 열어놓자. 우린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는 7차 고위급회담에서 정치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협력교류공동위원회, 사회문화공동위원회, 이런 공동위원회들을 우리가 다 나오자. 다 나오자, 예견되는 공동위원회들을.

그 다음에 그 공동위원회가 앞으로 지침으로 삼고 사업해야 할 부속합의서라는게 있습니다. 이 부속합의서들을 역시 우리가 가능하면 이번 회담까지 빨리하자. 정 못하겠으면 우리가 5월 19일, 5월 19일이라는게 공동위원회가 나와야 할 그 시한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부속합의서를 나와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남고위급회담 판문점 연락사무소, 이것을 요번에 타결하자. 우리는 요번에 이렇게 다 안을 내놨습니다, 기본문제와 관련해서.

핵통제위원회 그 다음에 이 3개 분과위원회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역시 운영하자. 기본 입장을 우리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역시 서두에 두번째로 말씀드린겁니다. 이번 회담이, 우리가 전체 우리 겨레들이 그야말로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런 무엇을 기쁨으로 우리 안겨주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번 논의도 되고 이게 합의가 잘 안돼서 그전에 적십자 당국들 사이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됐는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적극 떠밀어서 이번에 노부모방문단과 예술단 교환사업을 이걸 하나 이번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성사시키서 우리 좋은 기분을, 분위기를 조성해보자. 그야말로 우리 인민들에게 보내는 합의

서 이행의 첫 선물이다 이거야. 이것을 우리 드리자. 이런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요번에 그걸 제기를 했습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 잘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특례 사업의 하나로서 우리가 제기한 것은 리인모 선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리인모 선생은 지금 일반 리산가족의 이런 처지와도 또 다릅니다. 그분은 지금 장기간의 옥중생활, 옥중생활을 통해서 이 뭐 과거 얘긴 다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현재 어떤 상태냐? 우선 불구의 몸입니다. 옥중생활을 거쳐서 불구의 몸이됐고, 연세가 76살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야말로 소모할대로 다 소모하고 정말 인생 말년에 마지막 시기인 이 순간 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노인입니다. 또 이분은 지금 여기에 누구 연고되시는 가족, 친척이 살붙이라는게 누구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을 우리가 북에 돌려보내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무슨 북이 특별히 이롭거나 북이 해롭거나, 남이 해롭거나, 어디가 특별히 이득을 보거나 뭐 이런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건 우선 인도주의 문제 가운데서도 정말 아주 가슴 저런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혈육에 대한 사랑의 태도, 정말 윤리, 어느 점으로 봐도 우리가 이 문제만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쓰고 풀어줘야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이 보도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지금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처와 유복녀가 지금 북에 있다는 것을 이 리인모 선생이 알고 계시고 또 북의 가족은 자기 기다리던 그런 그 남편과 자기 아버

지가 남에서 그런 아주 불우한 처지에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아주 선처해서 이걸 잘 우리 해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좋은 일이 아니냐. 이것도 우리 특혜사업의 한 고리로서 역시 해결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종전부터 거듭 제기해온 문익환 목사, 임수경 학생의 석방 문제도 역시 같이 우리가 해결하자는 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8.15를 계기로 해서 북남 사이의 노부모들이 정말 이렇게 서로 왔다가고 예술단도 왔다가고, 리인모 선생이 정말 기쁨 마음으로 자기 한가족과 이렇게 서로 품에 안기고 또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학생이 자기 부모와 부인과 같이 한자리에 가족이 만나게 된다면은 이것은 그분들의 기쁨만은 아닐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기뻐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이번에 어떻게 하나 서로 잘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첫날 회담에서 강조한, 아주 강점을 두고 제기한 내용들은 이상과 같습니다.

〈질 문·답 변〉

질 문 : 8.15 교환 방문단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북측에서 제기하신 임수경 학생이나 리인모, 그 문익환 목사의 석방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답 변 : 우리는 이 사업을 전제조건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우린 하자는 것 아무, 무조건 이걸 우리 하자는 것입니다. 전제조건 안 붙입니다.

질 문 :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부속합의서 채택문제와 공동위원회의 구성, 이행기구 설치문제가 북과 남에 굉장히 틀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발언과 그 밖에 여러가지로 나와 있는데, 부속합의서가 채택이 안될 경우 공동위 구성을 북측에서는 그래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과정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답 변 : 예. 부속합의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합의를 집행할 공동위원회, 이것은 호상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공동위원회가 없이는 부속합의서가 나와도 부속합의서를 집행할 주체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속합의서는 없고 공동위원회만 먼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동위원회가 할 일이 없습니다, 사업대상이.

그러기 때문에 이걸 호상 연관돼 있습니다. 지금 날짜를 밝힌 것은 공동위원회는 날짜를 5월19일까지 밝혔습니다. 이걸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내 오자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부속합의서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 세우자. 지금 쌍방은 여기에 견해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동복 대변인에게서 그 KBS하고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도에 나왔다고 그래요. 우린 그걸 원래 이렇게 보도에 흘리지 않자고 했는데 나왔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우리 이 문제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에 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질 문 :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고향방문단 그, 저희들한테 내놓으신, 제의

해 놓으신 그 구성범위하고 우리측이 내놓은 범위하고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측에는 정치인도 들어가 있고 학자도 들어가 있고 학생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상호절충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답 변 : 예. 그것도 이제 협의가 돼야죠. 쌍방이 지금 내놨어요. 그거 이제 협의를 해야죠.

질 문 : 마침 핵통제공동위의 북측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니까, 핵문제에 대해 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쪽에서는 지금 북측에서도 우리 대미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북측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측이 그 전제조건으로 내놓은것은 IAEA 사찰과 함께 남북 상호사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남북 상호사찰에 지금 그 핵통제위 구성될때 발표문대로 하자면 5월 19일 또는 5월말까지 사찰제도를 마련해가지고 6월 적어도 한 10일이나 초순께까지는 그 사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미관계 포함해 가지고.

답 변(최우진 대표) :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자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현재 해당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북남관계 사찰은 현재 핵통제공동위원회 세차례에 걸쳐 토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늦어도 5월말, 5월하고 18일, 19일, 늦어도 5월말까지는 작성을 해

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 늦어도 5월말까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이와 같은 문건들을 합의보자고 합니다. 합의보면 20
일 이내에 사찰을 시작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북과 남이 합의
한대로 이 문제도 해나가고 또 국제원자력기구와도 자기 사업을 해나가
자는 것이 자기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럼 다른것 없으면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우리측 대표단 대변인 기자회견

* 일시 : 1992. 5. 6 (水), 12 : 52~13 : 20

* 장소 : 신라호텔(1층) 기자회견장

* 발표 : 이동복 대표

〈기 자 회 견 문〉

수고들 하십니다. 어제 7차 고위급회담에 참가하기 위한 북측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한 이래 여러 보도진 여러분들께 무슨 기사거리를 서비스 못해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제 첫 회담을 끝냈는데요. 첫 회담은 아시다시피 공개회의로 진행됐고 또 공개회의일 뿐만아니라 그 기초발언문만을 서로 낭독을 하는걸로 끝났는데, 기초발언문은 전부 보도진들께 배포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되풀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건 일체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질문을 받기전에 앞으로의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지금 요번 7차 고위급회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본합의서의 명문조항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시한을 못박아서 또 기본합의서에다가 직접 임무를 부여해서 5월 19일까지 발족시키도록 되어있는 몇개의 실천기구, 연락사무소와 군사공동위원회 그리고 교류·협력 분야에서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와 그밖에 합의하는 부문별 공동위원회, 그 밖에 부문별 공동위원회는 지금 남북간에 아직 의견이 합쳐지진 않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북측에서는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하나만을 지금 애길 하고 있고 우리는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통행·통신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가 타결이 안됐습니다만, 요 몇개의 공동위원회란 이름의 실천기구는 5월 19일까지 발족이 안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본합의서의 조항들이 부도가 납니다. 이 부도가 나는 사태를 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침에 잠시 말씀드렸습시다만 그동안 분과위원회가 여러번 있었고 어제 북측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한 뒤로 두차례의 대표접촉이 있었습시다. 어제 낮에도 있었고 사실 오늘 새벽에는 1시 반부터 한 3시 반까지 올빼미 회의도 했습시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직 완전히 타결이 되질 못했습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후에 대표접촉을 다시 가져야 되겠고, 대표접촉을 가진뒤에는 각 분과위원장들이 쌍방 총리의 위임에 의해서 각 분과위원회 별로 관장하고 있는 실천기구들의 설치 그리고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문안을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만 내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매듭을 짓게 됩니다. 대략 오늘 오후에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은 지금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그러나 아까 안대변인이 말씀하는것도 들었습니다

만은 쌍방이 기본합의서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문건의 일부 조항에 부도 사태가 나도록 해서는 안된다 하는데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가지고 오늘 오후에 있을 대표접촉에 나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오늘 첫 회의에서 있었던 사항은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남, 북, 남, 북, 이렇게 교대로 좀 해주시지요. 그래야 저도 좀 답변을 드리가 편할테니까. 북측기자 한분이 시간도 많이 늦고 그랬으니까 질문을 하나씩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해서 남, 북, 남, 북, 이렇게 해주시죠.

〈질문·답변〉

질 문 : 중앙방송 기자입니다.

남측에선 오늘 그 기본발언에서 조국통일문제를 민족대단결로 해야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도를 어떤걸 염두에 두고 말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변 : 말씀드리죠.

지금 조국통일 3원칙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조국통일 3원칙에 대해서 남과 북 쌍방이 해석을 좀 달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달리하는 영역때문에 남북간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총리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국통일 3원칙에

대한 우리측의 해석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민족단결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남과 북이 민족단결을 하려면 공통의 분모가 나와야 된다. 그 공통의 분모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각각 자기의 독자적인 의사로 사물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할려면 남과 북에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공통의 분모가 보장이 돼야만 이 민족단결문제가 비로소 단결의 차원에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공히, 뭐 어느쪽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그 개인의 창의라든가, 또 이런 국제연합의 인권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 기본자유, 이런 것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북측에서는 그러한 우리측의 설명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것을 압니다. 문제는 이문제에 관해서 남과북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문 : 동아일보 기잡니다. 요번 우리 총리의 기초발언에서 고령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북측에 제의했고 북한총리도 노부모방문단이란 이름으로 8.15를 전후해서 교환하자고 제의해서 상당히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는데요.

제 기억에 따르면 90년도에도 이산가족이 상당히 접근됐다가 북한측에서 예술단 교환방문에서 『꽃파는 처녀』와 『피바다』 공연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이루어진다는해서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북한측이 또다시 노부모방문단, 즉 고령이산가족 방문단에서 이런것을 전제조건으로 즉 「꽃파는 처녀」와 「피바다」를 반드시 공연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온다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수용 못해서 고령이산가족의 고향방문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답 변 : 오늘 연총리 기본발언에서도 전제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아까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 안병수 대변인도 이 문제는 전제조건이 일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제조건과 이 문제를 연관시켜서 답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구요.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것만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석간신문들도 이문제를 가지고 벌써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처럼 이렇게 「헤드라인」을 꾸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은 앞질러간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두개의 제안이 서로 취지가 다른 겁니다. 우리 제안은 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광복절이기 때문에 기본합의서의 발효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번 광복절에는 서로가 같이 이 광복절을 경축하는 민족적 기분을 좀 발양시켜 보자.

그러기 위해서 경축방문단을 교환하는데 그 경축방문단을 구성하는 가운데는 거기다가 여러가지 요소를 끌고루 담자. 이산가족도 담고 체육인도 담고 예술인도 담고 학계인사도 담고 학생도 담고 그래가지고 가 있

는 동안에 상대측 지역에서 이런 민족적 명절을, 광복절을 공동으로 경축하는 취지에 적합한 공동행사를 하자 이런거예요.

그런데 북측에서 오늘 제안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노부모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1985년에 한번 실행되다가 끊어졌던 것을 갖다가 연상시키는 제안이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과는 성격면에서 극히 일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쌍방간에 오늘 절충을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절충을 해서 실천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그 쌍방제안이 절충 가능하냐 안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좌우되지,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서는 전제조건 때문에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그런 시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 문 :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주조선사 기자입니다.

남측에서는 북남합의서에 명기된대로 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왜 미군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 말씀드리지요. 이 주한미군 문제는 두가지 북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각의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한미군 문제를 가지고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다 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것은 천부당만부당 하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라파에 북대서양동맹군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가있는 나라가 미국의 식민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존재예요.

1949년에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에 전쟁이 났어요. 그다음에 전쟁이 나니까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침범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지원군들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일부로 미군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전쟁이 평화상태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전쟁의 세력의 일부로 주한미군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주한미군의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남북한이 지금 기본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어요. 기본합의서를 충실히 이행을 해서 이행한 결과로써 주한미군의 문제는 처리가 될 겁니다.

그 기본합의서에 지금 문서에 합의했다고 그래서 아직 상황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상황이 달라지면, 이 기본합의서가 충실히 이행이 되면 그 과정에서 또 그 결과로 주한미군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질 문 : 앞에서 안병수 대변인은 시한내에 공동위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부분하고 합의서도 그에 맞게 내자는 부분에 대해서 남과 북이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소위 합의서의 순차적, 축차적 채택주장이 북측의 단일문건 그쪽 주장과 조금 일치가 돼서 우리측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건지 그걸 좀 여쭙습니다.

답 변 : 오늘 대표접촉에서는 일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기본합의서에 시한이 명시돼있는 실천기구를 시한안에 발족시키므로 해서 기본합의서의 해당 조항들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일차적인 대표접촉의 목적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논의될 거

예요. 또 하나는 지금 노부모 문제라든가, 8.15 경축방문단 문제라든가, 이것도 논의가 돼야죠.

그런데 지금 공동위원회하고 연락사무소 문제하고 부속합의서 문제는 아까 안대변인에게서 말씀하시는 걸 저도 들었는데 그 안대변인에게서 말씀하시는데는 너무 지나치게 하나는 도식화시키고, 하나는 일반화시켜서 말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속합의서 문제는 우리가 합의서에 명문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있냐 하면 합의서는 부속합의서라는게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기본합의서에 대한 상대적인 보통명사예요. 그럼 부속합의서라는게 뭐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2항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들이 자기 소관분야 합의사항을 이행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단 말이에요. 그 협의하고, 그 2조2항에 협의한 데 따라서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 부속합의서라고 하는 것은 남북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사항은, 그 합의사항이 합의서가 되고 그게 부속합의서예요.

그다음에 공동위원회는 2조3항에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부속합의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쌍방간에 구체적으로 이행·준수하는데 그것을 실천할 기구가 필요할 경우가 있고, 필요없을 경우도 있어요. 필요없을 경우에는 만들 필요가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의 실천기구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합의서를 합의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남북 간의 많은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행·준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은 자꾸 가고 아무것도 가시화되는 성과가 없으면 이것은 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를 채찍질하는 의미에서 몇개의 실천기구는 기본합의서에다가 시한도 못박고 임무도 못박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몇개의 실천기구는 시한안에 발족이 돼서 가동이 되도록 하자 해서 합의한 게 각 소관분야별로 하나씩 그걸 설정해 놨어요. 화해분야에서는 연락사무소, 그러면 연락사무소의 임무가 뭐냐? 쌍방간의 고위급회담 테두리안에서 연락과 협의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3개월안에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했구요.

그다음 군사공동위원회는 군사공동위원회가 불가침의 이행을 보장하는데 그중에서 다섯개의 임무를 부여했어요. 대규모 부대이동과 훈련의 통보·통제, 그다음에 비무장지대를 평화화하는 것, 그다음에 군인사교류, 정보교환, 그다음에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해서 공격무기를 제거하는 등 군비감축을 실행하는 문제, 그리고 검증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군사공동위원회는 3개월안에 만들어져 가지고 활동을 해라.

그다음에 교류·협력분야에서는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하고 기타 합의하는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3개월 안에 해라,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밖의 공동위원회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안나올 수도 있는데 우선 기본합의서에는 이걸 내놔라 하는 지상명령을 우리 양쪽에

다가 내놨어요. 그걸 우선적으로 우리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위원회가 더 필요할 수 있지요. 더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시한이 없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이 부속 합의서에 담겨질 구체적인 이행·준수 대책을 협의·해결하고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 여기는 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만들자』 이렇게 돼있지요. 그 부분을 지금 너무 일반화시키면 안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돼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질 문 :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IAEA 사찰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합의에 따른 남북 상호사찰이 반드시 실천돼야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과위에서 공동위 발족이후 실천문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남북한 상호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경제나 교류·협력분과, 공동위의 구체적인 실천문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변 : 그동안 이 핵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쪽 여러가지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거두절미 내지 곱해가 있는데요.

정부입장은 항상 이랬습니다. 이 핵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남북대화가 영향을 안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남북관계가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핵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핵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입니다. 시점이 있다, 그 시점이 언제냐? 그 말씀은 제가 못드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핵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찰이 우선 실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필요한 사찰 가운데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안전조치협정에 의한 사찰도 있고, 또 남북이 비핵화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상호사찰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찰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적기가 언제냐? 적기가 있습니다. 그 적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언급은 사양하겠습니다만 그 적기에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남북관계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영향을 안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정부의 위로 대통령각하로부터 아래로 관계하는 분들이 어느 한분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을 조금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러한 맥락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벗어난 적이 있다면 또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8.15경축단하고 노부모방문단 문제데요, 남북의 서로 다른 입장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아까 절충가능하냐 아니냐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어떤점이 가장 핵심인건지 말씀해 주시구요.

혹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저께 접촉을 하셨다면 윤곽이 드러날 테니까, 언제 접촉하셨는지 그 경위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 변 : 어제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이미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후에 한 두

어시간 만났고 또 오늘 새벽에 한 두어시간 만났습니다.

그건 이제 저하고 저희 임동원 통일원 차관하고 저쪽에 안병수 대변인하고 최우진 대표 이렇게 넷이 만났구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거 같구요.

그다음에 이제 8.15경축방문단하고 노부모 방문단입니까, 고방단. 그것하고의 어떤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판단은 못하겠어요. 다만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8.15 경축방문단은 목적이 8.15를 경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북측에서 오늘 제안하신 노부모관계는 그것은 순전히 이산가족만을 대상으로 해서 85년에 실시됐다가 중단된 「고방단」 문제를 1회에 한해서, 한번에 한해서, 이번 8.15때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럼 둘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께서 이미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좁혀보겠습니다. 좁혀지면 합의가 되고 좁혀지지 않으면 또 인제 문제가 있을텐데, 아까 제가 오늘 석간에 보고됐다는 내용을 제가 전해듣고 느낀 소감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전체와 전체를 이렇게 저절 해주셔야지, 거기서 일부 공통된 표현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아, 이건 합의된 대목이다』하면, 그것은 나중에 실망하시는 그런 결과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대비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고, 차이는 좁혀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4. 우리측 대표단 대변인 기자회견

* 일시 : 1992. 5. 7 (목), 11 : 43~12 : 00

* 장소 : 신라호텔(3층) 내신기자실

* 발표 : 이동복 대표

〈기 자 회 견 문〉

회의가 끝난뒤에 북측의 안병수 대변인하고 공동회견을 하기로 했고 그 공동회견의 내용도 『오늘 그 회의에서 확인 채택된 7차 고위급회담 합의문을 공동 낭독하는 것으로 국한을 하자』 이렇게 남북간의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공개회의가 되고 회의 석상에서 양쪽이 다 낭독을 했기 때문에 그 낭독을 위한 회견은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공동회견을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동안 여러가지로 이 회의가 성과를 거두도록 여러 보도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표단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기 위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번 회의와 관련해서 제가 무슨 발표하거나 그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회의가 전체적인 내용이 거의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구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지금 사실은 북쪽에서는 조금

제가 이 기자실에 내려오는데 대해서 신경을 좀 씁니다.

그 북측 대표단이 떠난뒤에 개별적으로 이런, 보도진하고 하는 것은 관여를 안하겠지만 대표단이 서울에 있는 동안은 좀 독자적으로 어떤 회견을 하고 그런데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걸 좀 감안해서 가지고 혹시 무슨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시면은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안에서 답변을 해 올릴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답변〉

질 문 : 이번 회담에서 제일 힘들게 타결을 본 것은 어떤 겁니까?

답 변 : 그걸 이렇게 설명 드리겠는데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과정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군사분과위원회 박용욱 위원장하고 북측의 김영철 위원장이 아마 오늘 새벽 6시에 타결을 했을 겁니다. 그분들이 거의, 뭐 밤에 거의가 아니고 잠을 한숨도 못자고 철야 절충을 해가지고 6시에 타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길 들었고요.

그리고 인제 내용면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비는 정치분야에 소위 그 이행기구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분과위원회가 맡고 있는 화해분야의 이행기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남북간에 상당한 기본 입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7차 고위급회담 합의문에 표현된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보

셨겠지만은, 그러한 내용으로 다듬어서 내놓는 데 굉장한 힘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 문 : 그 핵통제공동위원회도 다음 회의는 5월 12일날....

답 변 : 5월 12일 입니다.

질 문 : 그외에 말이죠, 뭐 진척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날짜외에 진척사항이.

답 변 : 진척사항은 특별한 게 없구요. 이번에 핵통제공동위원회 공로명위원장하고 최우진 위원장도 어제밤에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일단 5월 12일날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접촉에서는 특별히 어떤 진전을 이룩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통제공동위원회의 문제에 대한 토의는 5월 12일 열리게 될 그 회의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질 문 : 부속합의서의 형식은 단일로 한다는데 대충 합의한 겁니까?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부속합의서를 단일로 할 것이냐, 부속합의서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부속합의서는 복수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북측은 단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구체적으로 합의사항으로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디다마는 부속합의서는 복수일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이산가족방문단은 정례화하는데 합의된 겁니까?

답 변 : 우선 이번에는 이 8.15 47주년 기념행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 문 : 정리화시키긴 하는데 대체로 합의됐습니까?

답 변 : 아니, 그것은 아직 거의 그런게 없습니다.

질 문 : 우리측 군사공동위의 기능이 우리측의 원래 입장과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답 변 : 그건요, 지금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기본합의서에 설정돼 있는 표현에 정확하게 입각하고 있어요. 기본합의서 12조요? 12조는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훈련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군인사교류와 정보의 교환,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하여 공격능력을 제거하는 등 군축을 실현하는 문제, 검증문제 등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군사공동위원회 기능에서 받은 거예요.

질 문 : 북측이 고방단 제의 같은 것은 우리 것을 받아서 나온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식의 자세를 그동안 논의로 보아 무엇으로 풀이되는지요?

답 변 : 문자 그대로 금년에 기본합의서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기본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에 남북관계는 실증적으로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경축 방문단을 제의했고 저쪽에서는 이산가족 고방단을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둘 다 취지는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이후에 남북관계는 그 이전과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고려가 그 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결발언에서도 연총리, 정총리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더 추가해서 여러가지 그러한 가시적으로 합의서 시대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변화를 실감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될텐데요. 그것은 이제 지금 남북간의 소위 교류·협력 분야에서 경제와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논의가 될텐데. 다만, 한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천기구들은 부속합의서가 만들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아마 활동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구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내일 당장 남북간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질 문 : 부속합의서의 숫자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룬게 없습니까?

답 변 : 그것은 이번에 합의된게 없습니다.

질 문 : 전혀 논의도 안하셨구요?

답 변 : 아니, 논의는 했지요. 논의는 했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부속합의서의 숫자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남북간에 견해의 차이와 입장의 차이가 있지요. 그 차이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질 문 : 우리가 회담에 임하기전에 대표단에서 기대했던 것하고 북측에서 실제 내려와서 반응했던 거하고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기본합의서에 시한이 설정돼 있는 이행기구를 시한안에 발족시키는 문제

는 우리만이 구속을 받는 일방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 남북 쌍방이 같이 부담을 느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이번에 시한이 설정된 이행기구들은 시한안에 발족이 될거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기 때문에 예상과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문 : 쌍방의 합의사항을 보면 우리측이 중요사항에 있어서 양보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답 변 : 누가 양보를 해요?

질 문 : 우리측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

답 변 : 우리가 뭘 양보를 했습니까? 양보라는 것은 쌍방이 다 하는 거죠.

질 문 : 어느쪽이 더 많이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변 : 쌍방이 다같이 양보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질 문 : 이번 7차 회담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답 변 : 욕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문 : 우리 정총리께서 말이죠, 폐회발언을 통해서 그 남북 핵상호사찰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셨는데, 남북 핵상호사찰문제에서 북측이 양보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 것 같습니까?

답 변 : 글쎄, 5월 12일날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열리고요. 아마도 핵통제 공동위원회는 지금 5월 말일까지를 일단 핵사찰규정, 지금 이 핵통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비핵화

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찰규정이라고 우리는 봅니다만, 이것을 만드는 일종의 시한이 대략 5월 말까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런지 좀 지켜봅시다.

아직 시한은 있으니까요.

질 문 : 우리측이 북측의 핵사찰을 늦어도 6월말이라든가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변 : 그것은요,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북한의 그런 핵무기 개발의 실태가 지금 어느 단계 와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나라나,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사찰문제는 대입이 돼서 거기서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생겨난다 라는 뜻입니다.

질 문 : 이번 회담중에 정신대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일본의 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에 관한...

답 변 : 전혀 없었습니다.

질 문 : 이번 정치분과위에서 법률공동위와 비방·중상 중지공동위를 내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것인지?

답 변 : 지금 이렇습니다.

좀 오해들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법률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제안을 했고 또 그다음에 『비방·중상 중지공동위원회는 필요

하면 할 수 있다』 이것이 비방·증상 증지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나가 있어요.

이것은 남과 북이 거의 화해분야의 각 조항들을 이행·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해서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면은 만들자는 것이지, 우리는 이것을 가령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꼭 만들어야 된다, 받아 들여라 하는 입장은 아니예요.

법률공동위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좀 우리가 절대화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토대로서 우리가 내놓은 것이다.

질 문 : 이번에 북한에서 이인모 문제를 또 들고 나오는데요, 우리측에서는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답 변 : 이인모노인 문제네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서 연총리, 어제 기초발언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겠지만 이인모노인을 전쟁포로라고 그러는데 이인모노인은 전쟁포로가 아닙니다, 첫째로.

그 다음에 이인모노인 문제를 가령 거론한다면은 인도적인 관점에서 논해야 되는데 인도적인 관점에서 논한다고 그러면은, 남북간에는 이인모노인 못지않게 절박한 인도적인 사연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의 문제는 어떻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부됩니다. 일반에서 일부 이인모노인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언론의 사설이나 이런데서 글을 쓰시는 것도 봤고 또 일부에서 서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다뤄질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인모노인 문제 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견지에서 남북간에 그러한 인도적인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만 이것이 형평의 차원에서라든가,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옳은 접근방법이 아니냐 하는 문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가지 측면들을 종합해서 검토해야지, 이 노인 문제를 이인모 노인 문제가 이렇게 튀어나왔다 해서 아주 이것을 절대화 하거나 하나의 특별문제화 해서 하는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

가령 이인모 문제에 대해서 북측에서 지금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처리했을때 우리 남쪽에 그보다 더 절실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문제들에 대해서 북쪽에서도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북측 대표단 대변인 서울출발 성명

* 일시 : 1992. 5. 8 (금), 09 : 00~09 : 15

* 장소 : 신라호텔(1층) 기자회견장

* 발표 : 안병수 대표

〈성 명 문〉

서울 시민들과 남녘의 동포 형제들!

내외기자 여러분!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을 위해서 서울에 왔던 우리 북측대표단은 이제 3박4일의 회담 일정을 모두 끝마치고 평양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대표단은 출발에 앞서 우리 일행을 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해준 서울 시민들과 남녘의 동포형제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일행에게 불편이 없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준 남측 대표단과 관계 성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표단이 지난 5일에 서울에 도착한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서울 도착 성명을 발표하면서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대표단은 이번 제7차 회담에서 중요하게 첫째로는 이번 회담이 앞으로 분과위원회 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회담 사업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추진력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이번 7차 회담이 실천단계에 들어선 첫 회담으로서 단순히 북남합의서가 그저 빈 종잇장이 아니라 이것이 무게가 있는 그야말로 소중한 합의서이며 따라서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된 실제적인 효과를 우리 거래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회담으로서의 새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데 대해서 저희 대표단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의 이러한 입장과 회담에서 표시된 이러한 성의있는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직접 회담 정형을 녹화를 통해서 보셨고 다른 또 보도수단들을 통해서 다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 합의문, 이 합의문에는 '이번 7차 회담의 성과가 집약돼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항들은 많지만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번 제7차 회담의 성과의 중요한 하나가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비롯한 전반적인 회담 사업에 밝은 길을 열어 놓았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번 회담에서 그야말로 구체적인, 우리 거래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민족앞에 내 놓자고 하던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노부모 방문단과 예술단의 호상 교환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북측 대표단이 지금까지 남측에서 거듭 제기해 온 이런 문제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번에 전체 서울 시민들, 온 겨레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한 것을 우리가 생동한 눈으로 보듯이 아주 훌륭한 이런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는 이것이 두번째 우리가 성과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이런 성과들을 놓고 전체 겨레들과 또한 남측대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느끼며 동시에 이 고위급회담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성과의 합의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그 의의는, 의미는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첫째로는 우리가 고위급회담의 진전, 말하자면은 궁극적인 평화를 위해서,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서 착실한 전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가깝게 말씀드린다면은 이번 제7차 회담의 성과는 다음달 9월에 열릴 8차 회담의 성과를 상당한 정도로 담보하고 있는 이런 회담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회담이 가지는 의미는 북남합의서의 무게를 내외에 실감하도록 이렇게 한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공동선언, 신사협정, 지어는 종잇장에 불과하다, 역시 이것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마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더 우리가 확신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이번 7차 회담의 의

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번 7차회담이 모든 점에서 만족스럽게 되었다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핵통제공동위원회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의연히 남조선에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와 핵기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뿌리깊은, 역사적으로 내려온 이 의혹을 석연하게, 또 다소나마라도 전혀 풀어주지 못한 이 상태로 우리가 돌아간다는데 대해서 우리는 우선 첫째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사실상 우리 7차 회담에서 부속합의서 문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문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더 앞으로 전진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역시 다음번 8차 회담때까지 다시 연기된 일부 정치공동위원회, 화해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부속합의서들, 이런 문제들이 역시 의연히 숙제로 된채 우리가 이 서울을 떠나게 된 데 대해서 한편 좀 섭섭하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도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첫날 회담에서 우리 단장이 기본 발언에서 제기한 리인모 선생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리인모 선생님이 보도에 의하면은 여기 서울에 와서 신라호텔 주변에서 우리 북측대표단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신라호텔 주변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리인모 선생을 집에 돌려 보내주는 문제에 대

해서는 뭐 더 논할 여지도 없고, 우리 북측 대표단과의 상봉의 기회마저 역시 주어지지 않았으며 리인모 선생은 해당 기관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단순한 유감 표시보다도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표시한 인도주의적, 이런 획기적인, 이런 제안에 대한, 상당히 아주 그 너무나 어긋하는, 너무나 이 상식에 어긋나는 이러한 형태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북남합의서의 이행을 위해서, 또 북남합의서의 기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남측에서 어차피 풀어야 할 대미관계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창구일원화와 각계각층 인민들의 통일 논의의 자유, 대화와 접촉의 자유 허용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시사도 받지 못하고 가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전반적으로 고위급회담의 앞날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어느때 보다도 높아진 북과 남의 온 겨레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 또 우리 고위급회담에 대한 기대, 이것은 누구도 지금 무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북과 남 당국은 어느쪽도 이것을 의식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 민족의 규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쌍방은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반드시 자기의 옳은 길을 선택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저희들이 그 근거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조국통일 3대원칙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더 구체화한, 구현한 북남합의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행기구로서 공동위원회들을 내왔습니다. 더 물러설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앞으로만 가야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 북남 당국이 결국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길 밖에 없고, 서로 양보하고 진실한 입장에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손잡고 나아가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회담의 전도에 대해서 낙관하는 바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다음번 9월달에 열리는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의 성과, 이 성과는 거의 담보돼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발에 앞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떠나는 이자리에서 우리 대표단에 게 언제나 따뜻한 마음의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서울 시민들과 남녘의 동포 형제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附錄 2〉

雙方晚餐演說

—〈目 次〉—

- | | |
|----------------------------------|-----|
| 1. 國務總理 主催 晚餐 우리側 演說(5.5) | 165 |
| 2. 國務總理 主催 晚餐 北側 答禮演說(5.5) | 169 |
| 3. 서울市長 主催 晚餐 우리側 演說(5.7) | 174 |
| 4. 서울市長 主催 晚餐 北側 答禮演說(5.7) | 178 |

圖書 圖外 繪圖 繪生 圖繪 圖圖	3
繪 圖 圖外 繪圖 繪生 圖繪 圖圖	3
圖書 圖外 繪圖 繪生 圖繪 圖圖	4

1. 국무총리 주최 만찬 우리측 연설

...

* 일시 : 1992. 5. 5 (화), 19 : 27 ~ 19 : 38

* 장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 발표 : 정원식 국무총리

<연 설 문>

연형묵 정무원총리를 비롯한 북측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해 주신 내빈 여러분.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해 서울에 오신 북측대표단 여러분과 오늘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맞는 우리 모두의 가슴은 봄바람처럼 훈훈한 동포애로 가득차 있습니다.

먼길을 오신 북측대표단과 일행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돌이켜 보면, 89년 2월 쌍방 5명의 예비회담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처음 만난 이래 1년반만에 남북고위급회담을 탄생시키고 그동안 7차례 본회담을 통해 630여명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화해와 협력의 길을 닦는 대역사에 참여해 왔습니다.

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그동안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남북을 왕

래한 인원은 이제 3,300여명에 이르면서, 단절과 불신에 가로막혔던 교류의 샘물이 새로운 물줄기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이같은 끈질긴 노력이 남북간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다시 잇고 사람과 물자가 자유로이 오가는 힘찬 원동력이 되어 마침내는 우리 7천만 온 겨레가 화해와 평화와 번영의 대광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빈 여러분.

남과 북은 지난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킴으로써 우리 겨레 스스로의 의지로 대결과 반목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은 7천만 온 겨레에게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감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운 기나긴 세월동안, 국토와 민족이 갈라져 있음으로써 온 겨레가 겪어온 고통과 손실이 너무나 엄청나고 쓰라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역사적 문건은 충실히 이행되고 준수될 때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은 온 겨레의 염원과 의지를 담은 합의서와 선언 내용을 모든 성의와 정성을 다해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7천만 겨레는 합의서를 이행하는 첫 걸음으로 시작된 3개 분과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기대와 희망으로 지켜보아 왔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5월 19일로 시한이 명시

된 남북연락사무소와 공동위원회 등 이행기구들을 발족시키는 일임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번 제7차 회담에서 이 이행기구들이 정해진 시한안에 모두 발족될 수 있도록 해당 합의서를 서명·발효시킴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준수하려는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내빈 여러분.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는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교류·협력하여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기점입니다.

남과 북은 거래의 자존과 번영을 지향하면서 하루속히 평화로운 민족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남과 북은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에 옮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대책과 절차를 마련해 나가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행대책이 일괄 합의될 때까지 실천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은 각 분과위원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족될 공동위원회를 잘 지도하고 조정하여 남북간의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평화통일의 튼튼한 가교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화해의 징표로서 나는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귀측의 성의있는 노력을 재삼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산가족문제는 당사자들의 연령이나 인간적 고통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산가족들의 애틍는 고통을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분들의 고통을 아물게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산가족문제는 쉽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빈 여러분.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와 함께 이제 민족사의 수레바퀴는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수레를 다시 멈추어 서게 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평화통일의 그날까지 힘차게 또 힘차게 밀고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할 거래와 역사의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의 대표들이 이를 확인하여 좋은 결실을 맺음으로써 또 한번의 역사적 회담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이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회담기간 내내 이어져 조국통일의 금자탑을 쌓아 올리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 다같이 잔을 높이 들어 건배할 것을 제의합니다.

자, 건배!

2. 국무총리 주최 만찬 북측 답례연설

* 일시 : 1992. 5. 5 (화), 19 : 39 ~ 19 : 49

* 장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 발표 : 연형묵 정무원 총리

〈연 설 문〉

정원식총리와 남측대표 여러분!

손님 여러분!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에 온 우리 북측대표단은 오늘밤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만날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느모로보나 한 동포, 한 형제들이름이 틀림없습니다.

사상과 리념은 비록 다르지만 우리는 한 조상의 피를 나눈 동포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가 바쁘게 친숙해져서 분렬의 아픔을 나누며 통일외래일을 그리는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제날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싸우던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도 사상과 리념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때에 하

물며 같은 민족인 우리가 서로 사상과 리념이 다르다고 하여 계속 담을 쌓고 남남처럼 살아나갈수 없습니다.

세계에 류례없는 단일민족인 우리가 근 반세기에 걸치는 단절의 비극사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털어버리는것은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이며 민족사의 명령입니다.

북과 남은 이러한 숭고한 민족적립장과 투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침내 고위급회담을 마련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킴으로써 조국통일의 훌륭한 이정표를 마련하는 큰 일을 해놓았습니다.

북과 남이 제6차 평양회담에서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효시킨것은 그 어떤 외부세력도, 사상과 제도의 그 어떤 차이도 수천년동안 한 피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적리념의 력사적승리인 동시에 자주조선의 빛나는 승리로 됩니다.

오늘 쌍방이 함께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우리들이 발효시킨 력사적인 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족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자주정신입니다.

자주성은 개별적인간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도 생명과 같이 귀중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힘을 빌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북남사이에 력사적인 합의문건들이 탄생될 수 있는것도 전적으로 자주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이며 앞으로 그것이 얼마나 큰 생활력을 발휘하는가 하는것도 중요하게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얼마나 확고히 견지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게 될것입니다.

자주의 원칙을 지켜나가는데서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북과 남이 다같이 자주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외세의 구속을 받을 때 그것은 불가피하게 북남합의서의 리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우리들의 회담에도 지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더우기 그러한 외세와의 관계가 북남대결에 리용될 때 그 후과는 참으로 엄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빛나게 관철해 나가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그 어떤 구속도 받음이 없이 우리식으로 자주적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특히 오늘의 격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보면서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온 우리 공화국정부의

로선과 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북과 남이 함께 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구현한 북남합의서에 따라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새 장을 열어 나가게 된 오늘 과거의 대결시대를 반영한 낡은 대외관계를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조정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현실적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결의 립장에서 동족보다 외세를 더 가까이하고 공동의 민족적리익보다 서로 다른 리념을 먼저 내세우던 과거는 청산되어야 하며 이제는 자주와 화해의 립장에서 외세보다 동족을, 서로 다른 리념보다 공동의 민족적리익을 앞세우는 새로운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이 다같이 자주의 길에 함께 나설 때 북남합의서의 리행은 확고하게 담보되고 우리의 민족적리익은 튼튼히 지켜질 것이며 통일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갈망이 지난날의 뼈저린 망국사에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에게는 자주독립이 없었던 탓에 참으로 형언할수 없는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이 강요되어 왔습니다.

오늘 내외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제시대의 《종군위안부》 문제는 우리 민족이 강요당하여온 비극적인 재난과 치욕의 극치라고도 말할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북에 살건, 남에 살건 관계없이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도 외면할수 없는 전민족의 존엄과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있

으며 이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민족공동의 과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북측대표단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북과 남이 공동보조를 취할것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옹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제안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지금도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과 남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하여 보조를 함께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북측대표단은 래일부터 열리는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도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정확하고도 신속한 리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성의와 아량을 가지고 협의에 립할 것이며 고위급회담이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평화와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제끼는데 응분의 기여를 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래일 회담에서의 성과와 자리를 함께 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시장 주최 만찬 우리측 연설

* 일시 : 1992. 5. 7 (목), 19 : 20~19 : 25

* 장소 : 하이얏트호텔 「그랜드볼룸」

* 발표 : 이해원 서울시장

〈연 설 문〉

연형묵 총리를 비롯한 북측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게 된것을 1천만 서울시민과 더불어, 무한한 기쁨과 반가움으로 뜨겁게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북측대표단 여러분께서는, 네번째 서울에 오셨지만 서울시민은 언제나 새롭고 기대에 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에 보내는 국민적 성원도 그 어느 때보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지 4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총리 일행의 역사적 만남이 이곳 서울에서 이루어진 재작년 9월 이후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께서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7천만 겨레의 소망과 민족의 염원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은 역사적인 UN동시가입으로 통일을 향한 공존공영의 길을 열었고, 평화를 제도화하는 출발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13일 이곳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통일을 향한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공동위원회 등 이행기구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역사의 현장에서, 겨레의 선봉에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대표단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루속히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이 이룩되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곳 서울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통해 민족적 긍지를 높이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주역 도시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전을 상징하는 국제도시가 되었으며, 세계에 몇 안되는 정도(定都) 600년의 수도로서 위용과 품격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81개국의 상주 대사관이 있고, 관문인 김포공항을 통해 드나드는 인원이 연간 9백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6백대씩 자동차가 늘어나며, 시간당 평균 2천 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소비하는 거대한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서울시의 행정을 맡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그 역할이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러나 1천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편리한 현대 도시의 기반을 닦아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 자동차로는 세시간 남짓이고, 비행기로는 한시간도 채 안되는 거리에 있는 두 도시가 각기 이룩한 도시 건설의 성과와 경험을 상호 교환하고, 공유하여 민족 공동 번영의 터전으로 함께 가꾸어 나간다면, 온 세계가 부러워 할 세계속의 도시로 그 이름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북측대표단 여러분!

우리가 가야할 목적지는 자유와 인권, 행복이 넘치는 민주통일국가의 건설이고,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첫 관문인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남북기본합의서는 실천이 뒤따라야만 그 참뜻을 빛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북측대표단 여러분이 서울에 오신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어린이들과 함께 고궁이나 야외에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큰 선물은 민주통일조국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후손들에게 복되고 영광스런 통일조국을 물려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개방과 화해의 조류는 동서세계를 가르는 장막을 걷고,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협력의 새 시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넓은 세계에서 우리 한민족의 발길을 가로막는 장벽은 없습니다.

우리는 힘차게 세계로 나아가 우리의 밝은 앞날을 개척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민주국가, 7천만이 하나가 된, 우리 겨레가 펼칠 21세기는 얼마나 눈부시고 위대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민족의 소망과 꿈이 한데 어울리는 영광된 세기가 도래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북측대표단 여러분의 이번 서울 방문이 시종 편안하고 즐거운 여정이 되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연형묵 총리와 북측대표단 일행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뜻에서 모두 함께 일어나 축배를 드실 것을 제의합니다.

건 배!

4. 서울시장 주최 만찬 북측 답례연설

- * 일시 : 1992. 5. 7 (목), 19 : 28 ~ 19 : 40
- * 장소 : 하이얏트호텔 「그랜드볼룸」
- * 발표 : 연형묵 정무원 총리

〈연 설 문〉

서울시장선생!

각계인사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온 거래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을 성과리에 결속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먼저 평양과 서울을 하나로 잇는 따뜻한 혈육의 정이 오가는 이 환영연에 우리를 초대하여준 시장선생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북남고위급회담은 그 사이 민족의 뜨거운 통일열망에 고무되면서 우여와 곡절의 파도를 넘어 중대한 합의들을 이룩하고 분과위원회들을 내왔으며 이번 제7차 회담에서는 불가침과 협력, 교류분야의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북남연락사무소를 설치할데 대한 합의서들을 서명발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화해와 평화, 통일을 향하여 첫 걸음을 댄 우리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있는 제6차 회담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된 것은 북과 남이 적대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의 리념밑에 새출발을 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였습니다.

이번의 제7차 회담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북과 남이 정치군사적대결의 장벽에 돌파구를 열고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켰다고 말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에 로부모방문단과 예술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 겨레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며 서로 협력하고 통일로 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북남합의가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준 첫 선물이며 귀중한 열매입니다.

참으로 이 모든것은 분렬의 고통을 겪으며 통일을 열망하여온 우리 겨레에게 북남의 합의가 결코 빈공약이 아니라 명실공히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위한 생활력있는 공동의 서약임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북과 남은 서로 화해의 문을 더 넓게 열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할 수 있는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땅에 묻었다고 하여 저절로 알찬 열매가 맺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심어놓은 북남합의서라는 좋은 씨앗도 성의를 가지고 품을 들여 물과 거름을 주며 잡초들을 없애버려야 민족이 바라는대로 훌륭한 열매를 맺을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은 민족을 위하여 뿌린 첫 씨앗을 정성껏 가꾸어 반드시 래일의 통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해와 불신과 모든 적대감정을 씻어버리고 화해하고 단합하려는 립장과 의지를 굳건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서로 화해하지 못할 원수도 아니고 서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할 적수도 아니며 서로 문을 닫아매고 살아야 할 이민족도 아닙니다.

더우기 불가침을 확약하고 화해, 협력의 첫발을 댄 오늘에 와서까지 북이나 남이나 하고 갈라만 보던 분렬과 대결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리유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세가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강요해온 배타와 불신의 그릇된 관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하나의 피줄,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점에 확고히 서서 화해와 단합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야 합니다.

화해와 단합을 향한 이 력사적 전환기에 북남당국의 역할뿐 아니라 정계와 사회 각계의 민족적 책무 또한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같이 조국통일의 주체이며 민족적 단합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선사람으로서 통일성업의 주체임을 저버리고 그 관조자로 남아있는다는 것은 수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의 각계인사들과 광범한 인민들이 외세보다 동족을 더 먼저 생각하고 사상과 제도보다 민족의 가치를 더 중시하면서 단합의 광장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는 평양과 서울길을 당국자들만 다녔지만 래일에는 그 길을 정계와 사회 각계의 인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수 있어야 하며 대화와 접촉의 길을 넓혀야 합니다.

인민을 떠난 민족에 대해 생각할 수 없듯이 인민대중을 떠난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 관점밑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옹기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정치로써 만난을 뚫고 세기적인 기적을 이룩한 체험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의 주체로서의 각계각층의 단합과 적극적인 참여로써 만 모처럼 열린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물고도 더 활짝 터쳐나갈수 있고 통일의 새 아침도 앞당겨올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만나 흥금을 터놓고 통일론의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북과 남 사이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통일대화를 꺼려할 필요도 없으며 누구는 만날수 있고 누구는 만날수 없다고 할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수십년세월 통일을 목마르게 바라온 우리 겨레가 더는 동족끼리 만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문제시하던 잘못된 폐쇄의식과 대결관념의 억울한 피해자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정계와 사회계의 인사여러분들은 응당 공직과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겨레의 만남을 가로막고 민족의 단합을 저해하는 온갖 대화부정적잔재들을 시급히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접촉과 대화의 균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기성의 회의와 편견을 버리고 쌍무적이든 다무적이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민족의 총의를 모아 조국통일의 방도를 모색정립하기 위한 협상마당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겨레가 깊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정치인의 슬기와 의지가 있고 통일을 앞당겨 애국애족하는 정치인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밑에 여러분들과의 광범한 접촉과 대화를 널리 발전시키며 북남사이에 모처럼 이룩된 합의들을 모든 성의와 노력을 기울여 착실히 리행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으로 화해와 협력의 길을 넓혀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으며 온 겨레가 바라는 90년대 통일도 앞당겨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애국애족의 립장으로부터 서로 뜻을 같이하고 지혜를 합쳐 북남합의서의 옳은 리행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적극 도와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시장선생과 이 자리에 참석한 각계인사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다같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